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석사학위논문

노동관련 소송 증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사법정책에 대한 함의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이 병 현

노동관련 소송 증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사법정책에 대한 합의

지도교수 홍 준 형

이 논문을 행정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0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이 병 현

이병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위 원 장 이 철 수 (인)

부 위 원 장 우 지 숙 (인)

위 원 홍 준 형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노동분쟁에서 소송수단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 ‘그러한 요인들의 추세를 분석하여 사법정책에 대한 함의’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떠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지 실증연구를 진행한 것이 매우 드물었다. 따라서 보다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노동관련 소송의 증감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그러한 변화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기구 및 조직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그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다.

노동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고 다양한 해결방식이 있지만, 본 연구의 대상은 법원의 소송 제기에 국한하였다. 이는 국내의 사회·경제적인 변수의 상황에 따라 노동분쟁에서 소송수단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법연감과 정부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16개 광역시·도의 횡단면적 자료들을 결합한 144개의 패널자료(penal data set)를 사용하였으며, 민사소송의 ‘임금’소송과 손해배상에서 ‘산업재해’ 1심 소송을 종속변수로 하였다. 독립변수는 노동조합 가입자 수, 3차 산업 종사자 비율, 변호사수, 실업률, 비정규직 비율이며, 민사 1심 총소송수와 임금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통제변수로 삼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모

형은 고정효과모형(Fixed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model) 두 가지 모형 중 여러 기준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고정효과모형을 통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고,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유의수준에서 ‘노동조합가입자의 숫자’는 노동관련 소송수에 음(-)의 영향을 주며, ‘변호사 수’는 노동관련 소송수에 정(+)의 영향을 준다. 그리고 5% 유의수준에서 ‘3차 산업 종사자 비율’과 ‘실업률’이 노동관련 소송에 정(+)의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 5% 유의수준에서 ‘비정규직 종사자 비율’은 연구 가설과는 반대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종사자 비율’이 다른 질적인 연구와는 달리 노동관련 소송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은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소송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이 부족하여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서 소송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추측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독립변수들에 대한 추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고정효과모형을 통하여 추정한 회귀계수와 독립변수들에 대한 추세분석을 통하여 얻은 예측 값을 이용하여 미래 노동관련 소송 수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향후 노동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증가하게 될 노동관련 소송을 보다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의 대안으로써 노동법원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노동법원의 도입뿐만 아니라 적절한 사법행정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

사법부의 조직과 인력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 노동분쟁, 소송수단 사용, 노동법원

학 번 : 2011-22205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4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7
제1절 노동분쟁	7
1. 노동분쟁의 특수성	7
2. 노동분쟁의 유형과 종결절차	9
(1) 노동분쟁의 유형	9
(2) 노동분쟁의 종결절차	10
(3) 각국 법원의 노동분쟁 심사범위	10
3. 분쟁해결 절차에서 소송수단 사용의 의미	12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14
1. 국내 관련 선행연구	14
(1) 소송수단 사용에 대한 질적 연구	14
(2) 소송수단 사용에 대한 양적 연구	17
(3) 노동분야와 관련된 양적 연구	17
2. 국외 관련 선행연구	21
3. 소결	24
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26

제1절 연구문제의 선정	26
제2절 변수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26
1. 종속변수	26
2. 독립변수	27
(1) 노동조합 가입자 수	27
(2) 3차산업 종사자 비율	28
(3) 변호사수	29
(4) 실업률	30
(5) 비정규직 비율	30
3. 통제변수	31
(1) 민사 1심 총소송수	31
(2)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32
제3절 연구의 분석틀과 가설의 설정	34
1. 연구의 분석틀	34
2. 가설의 설정	35
제4절 연구의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모형	39
제4장 분석결과	45
제1절 기초통계량	45
1. 종속변수	45
2. 독립변수	49
3. 통제변수	53
4.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56
제2절 각 모형별 분석결과	58

1. 양 모형의 비교 -----	58
2. 모형의 선택 기준 -----	59
3. 자기상관 검정 -----	61
제3절 결과 분석 및 평가 -----	63
1. 고정효과모형의 결과 분석 -----	63
2. 가설의 검증 및 분석 -----	65
3. 종합 -----	67
 제5장 사법정책에 대한 함의 -----	 68
제1절 추세분석 -----	68
1. 의의 -----	68
2. 각 변수들에 대한 추세분석 결과 -----	70
(1) 노동조합 가입자 수 -----	70
(2) 3차산업 종사자 비율 -----	72
(3) 비정규직 비율 -----	30
제2절 노동관련 소송에 대한 예상 -----	76
제3절 함의 -----	78
 제6장 결론 -----	 82
제1절 연구의 의의 -----	82
제2절 연구의 한계 -----	83
 참고문헌 -----	 86
Abstract -----	93

표 목 차

[표 1] 변수의 정의	33
[표 2] 연구 가설의 정리	39
[표 3] 노동 관련 소송의 기초통계량	45
[표 4] 2003년~2011년 각 지역별 노동관련 소송수	47
[표 5] 2003년~2011년 각 지역별 독립변수 통계	49
[표 6] 2003년~2011년 각 지역별 통제변수 통계	53
[표 7] 2003년~2011년 각 지역별 민사1심 총본안소송수 통계 ..	53
[표 8]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56
[표 9] 고정효과모델과 확률효과모형의 분석결과 비교	58
[표 10] Hausman 검정 결과	60
[표 11] Wooldridge 검정결과	61
[표 12]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	63
[표 13] 연구 가설의 검증 결과	65
[표 14] 노동조합 가입자 추세분석 결과	71
[표 15] 3차 산업 종사자 비율 추세분석 결과	73
[표 16] 비정규직 비율 추세분석 결과	75
[표 17] 2021년 노동관련 소송수 전망	76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I	34
[그림 2] 연구의 분석틀 II	35
[그림 3] 2003년~2011년 전국 노동관련 소송수	46
[그림 4] 2003년~2011년 노동조합원수	50
[그림 5] 2003년~2011년 3차산업 종사자 비율	51
[그림 6] 2003년~2011년 비정규직 비율	52
[그림 7] 2003년~2011년 민사1심 총본안소송	53
[그림 8] 2003년~2011년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55
[그림 9] 노동조합 가입자 추세분석 결과	70
[그림 10] 3차 산업 종사자 비율 추세분석 결과	72
[그림 11] 비정규직 비율 추세분석 결과	7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노동분쟁에서 소송수단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 ‘그러한 요인들의 추세를 분석하여 사법정책에 대한 함의’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떠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지 실증연구를 진행한 것이 매우 드물었다. 이는 법학에서는 거시적 차원에서는 특정 제도나 법률에 대한 비교 연구, 특정 제도의 도입에 대한 당위성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미시적 차원에서는 개별 판례가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는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사법 통계나 소송 수단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거시적 변수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행정학에서는 행정부의 조직, 인력, 예산 등을 주 연구대상으로 삼으며, 법원 조직의 각종 통계자료나 제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하였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법부의 통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노동 분쟁의 경우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노동법원 설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제시는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개별 소송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떠한 요인들이 소송수 증감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각종 사법 통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적절한 사법행정 서비스가 제공되고, 사법부의 사법정책이 객관적 자료와 근거

를 바탕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분야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동분쟁은 전통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산업사회의 새로운 분쟁 유형이며, 한국 사회에서 분쟁 발생 시 어떠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지 그 법질서의 정착과정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덧붙여 최근 노동 관련 소송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 이는 1997년 IMF 이후 계속하여 증가된 고용유연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근로관계가 집단적 근로관계 중심에서 개별적 근로관계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양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김소영(2005)은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개별적 분쟁의 증가에 대응하는 분쟁처리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거보다 많은 비정규 고용을 활용하고 있으며, 정규직에 대해서도 연봉제, 성과급 등의 능력주의 경영방식, 그리고 고령화에 대비한 여러 종류의 임금피크제 등이 빠른 속도로 도입되어서 한 사업장 내에서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매우 다양화되고 개별화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권리 분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¹⁾ 양동훈(2009)은 최근에 개별 근로자들이 제기하는 노동분쟁의 비중이 크게 증하고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먼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하여 기업에 확산된 성과주의적 인력관리가 한 원인이 되었다고 진단한다. 연봉제와 같은 성과급이 확대되고, 개별 근로자들의 성과평과에 기반 한 개별적 인사노

1) 김소영(2005), 개별적 근로관계 분쟁의 증가에 대응하는 분쟁처리시스템의 필요성, 한국노동연구원, p. 1

무관리가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개별 근로자의 불만이 과거보다 고조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기업들이 노동유연화를 선호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고용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 간의 공정처우 위반이나 계약갱신 거부 등의 분쟁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 단체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개별 근로자들이 분쟁 발생 시에 노동조합에 의존하기 보다는 개별적인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²⁾는 것이다. 산업이 고도화 되고 지식 노동이 심화·확대될수록 근로관계를 둘러싼 조건은 다양화 될 것이고, 이러한 다양한 개별적 근로조건의 체결 및 해석, 분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노동 분쟁에 대하여 분쟁해결수단 중 하나인 소송 수단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試圖) 역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노동관련 소송의 증감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그러한 변화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기구 및 조직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희성(2005)은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 제도 하에서는 전문성, 공정성, 독립성에 대한 회의가 일고 있고 심급구조의 다단계화로 인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법원과의 심급적 관계에서 노동위원회는 법원을 전혀 구속하지 못하는 근원적인 한계를 받아들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이희성, 2005: p. 949)고 진단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오

2) 양동훈(2009), 개별 노동분쟁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경영논총 제20집 2호, p 120

래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노동법원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 볼 수 있다. 분쟁해결제도를 재정비 하는 측면에서 하나의 대안으로써 전문법원인 노동법원의 신설은 개별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주고, 재산권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국가 경제에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노동분쟁의 특수성을 고려한 노동전문법관의 재판을 통하여 노동관계 당사자의 권익구제에도 보다 실효적일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이 연구의 대상은 노동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에 제기되는 소송에 국한한다. 노동분쟁의 해결방법으로는 법원에 의한 해결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조정이나 협의, 행정기관의 개입, 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해결 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국내의 거시적인 사회·경제적인 변수의 상황에 따라 노동분쟁에서 소송수단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법원의 소송 제기에 국한하였다.

사법연감에서는 민사본안 사건을 종류별로 집계하고 있는데, ‘임금’과 관련된 소송을 따로 집계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16개 광역시·도의 여러 사회·경제적인 변수들이 2003년부터 국가통계(지역통계, e-지방지표)의 형식으로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법연감을 분석대상으로 하되, 민사소송의 ‘임

금'소송과 손해배상에서 '산업재해' 1심 소송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³⁾

한편, 노동관련 소송에는 행정소송이 포함된다. 행정소송의 종류별 분류에는 '근로관계'의 행정소송이 있다. 2011년 근로관계에 대한 행정소송은 총 4,271건이 있었으며, 2012년에는 3,879건으로 그 숫자가 적지 않으며 총 행정소송의 15~1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관계에 대한 행정소송 역시 노동관련 분쟁의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나 본 연구에는 포함시킬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근로관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근로기준법'에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를 규정하고 있어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만 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

3) 연구대상을 민사사건 1심으로 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에 사건을 배당하는 민사사건의 기준이 별도로 존재한다.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은 '합의부',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은 '단독판사'가 재판을 하게 되고, 이 구분이 향후 항소심에 있어서 관할 법원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단독판사 재판에 대한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맡게 되고, 합의부 재판에 대한 2심은 고등법원에서 맡게 된다. 단, 단독판사 재판이라도 소가가 8,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등법원에서 맡게 된다.

그리고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까지의 단독사건은 3가지로 분류된다.

1. 소가 2,000만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단독사건으로 소액사건심판법 적용을 받는다.
2. 소가 2,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의 사건은 중액단독사건이라 하는데, 이 사건의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을 담당한다.
3. 소가 8,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의 사건은 고액단독사건이라 하며 2심은 고등법원 재판을 담당한다.

따라서 현행의 법원조직법에 따를 때 소송목적의 금액에 따라서 2심 재판법원이 지방법원이 되거나 관할 고등법원이 될 수 있다. 현행 사법연감에 민사본안 사건을 종류에 따라 분류한 자료에 대해서 또 다시 소송가액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있지 않는다. 따라서 종류별 분류에 따른 임금과 산업재해 민사 항소심과 상고심이 최초 소제기가 광역시인지, 광역도인지에 대한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어서 1심으로 한정하였다.

의 재심에 대하여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⁴⁾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9조 재판관할에 대한 규정⁵⁾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근로관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서 접수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정소송을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소송이 존재하나, 사법연감에서 죄명별 재판 인원에 관한 지역별 분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형사소송의 경우 국가기관이 형벌을 가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인 소송수단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는 거리가 있어서 제외하게 되었다.

분석의 기초 단위는 각 연도별 광역시·도로 한정한다. 사법연감에서 제공하는 통계는 법원의 관할에 따라서 제공되기 때문에,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⁶⁾ 또

4)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 5) 행정소송법 제9조(재판관할) ①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
- 6) 16개 광역시·도로 분석단위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광역시의 경우 인근 도와 관할이 조금씩 겹치는 문제점이 있었다. 대구의 경우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포함되는 영천시, 청도군,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이 대구지방법원의 관할이며, 광주의 경우 전라남도 관할인 나주시, 영양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이 광주지방법원 관할이다. 그 외에 대전지방법원은 충청

한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로 사용할 여러 사회·경제적인 제 변수들이 국가통계포털 지역통계에서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분석의 단위는 16개 광역시·도로 한정하였다.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1절 노동분쟁

1. 노동분쟁⁷⁾의 특수성

근로자(혹은 노동조합)와 사용자(혹은 사용자단체)간의 의견이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노동분쟁을 지칭하는 말에는 노동분쟁, 노사분쟁, 노동쟁의 등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용어들은 노동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혹은 노동조합)와 사용자(혹은 사용자단체)간의 분쟁뿐 아니라, 근로자와 근로자(혹은

남도 소속인 금산군, 울산지방법원은 경상북도 관할인 양산시가 포함되었다.

- 7) 노동분쟁은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법적 용어는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에서 노동쟁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조합)간의 분쟁을 의미할 수도 있다(이철수·박은정, 2005: p.67).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노동분쟁 중에서도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의 법적 소송 행위에 한정하여 노동분쟁을 분석하고자 한다.

노동분쟁이 다른 법 양식과 다른 특수성은 다음과 같다.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다. 따라서 민법의 고용관계에 속하지만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의 계약의 자유를 제약하는 제반 법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관계는 특수한 법률관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김형배, 2010). 이러한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과 상법 이외에도 민사소송법의 규정들도 보충적으로 적용되어 진다. 게다가 노사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계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감독권에 따라야 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계속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종속적인 관계에 처할 수밖에 없다(이병태, 2005)는 특징이 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 상품과 같이 일회적인 매도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인격과 관련된 문제를 도외시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노동분쟁은 다른 일반적인 분쟁과는 다르게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야 한다⁸⁾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8) 이희성(2005),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동법원의 도입정책의 필요성과 방안, 법과 정책연구 5권 2호, p. 933

2. 노동분쟁의 유형과 종결절차

(1) 노동분쟁의 유형

노동분쟁은 주체에 따라 그 종류도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서장권(2005)은 분쟁주체에 따라 노사간 분쟁/노노간 분쟁, 집단적/개별적 분쟁으로 구분하였다. 노사간 분쟁은 노동분쟁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분쟁으로써 노동자 또는 노동자집단과 사용자 사이의 분쟁을 뜻하며 노노간 분쟁은 노동자 개인과 노동조합과의 분쟁을 뜻한다. 집단적/개별적 분쟁의 구분은 분쟁의 당사자에 따른 분류로써 집단적 분쟁은 노동조합이 일방적 당사자가 되는 분쟁이며 개별적 분쟁은 근로자 개인이 분쟁 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뜻한다.⁹⁾

9) 이철수·박은정(2005)에 따르면 노동분쟁이 분쟁의 주체에 따라 개별적 분쟁과 집단적 분쟁으로 구분되기 시작한 것은 1806년 프랑스에서 근로계약과 관계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법원을 설립하는 법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부터라고 한다. 노동법원이 설립되기 이전 시기는 아직 노동조합이 정착되지 못했던 단계였고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이라는 개념이 성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을 둘러싼 분쟁은 일반 사법상의 계약상 분쟁과 동일한 형태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노동분쟁은 일반 계약법적 원리로부터는 해결될 수 없는 특수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 바로 이 점으로부터 노동법원의 설립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그 후 노동법원은 개별 근로자 및 사용자와 관련된 근로계약상의 분쟁을 그 관할대상으로 하게 된다. 초기 노동분쟁이란 곧 개별근로계약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개별적 노동분쟁이었으며, 점차 노동조합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 개별적 노동분쟁과는 별도의 노동조합을 주체로 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과 관련된 분쟁을 집단적 노동분쟁으로 정의하고, 그 분쟁의 해결 역시 개별적 노동분쟁과는 다르게 처리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철수·박은정(2005),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p. 70, 노동법연구 제 18호

(2) 노동분쟁의 종결절차

노동분쟁의 종결절차는 매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해결이 있으며, 사적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근로감독행정에 의한 분쟁해결, 노동위원회에 의한 분쟁해결, 법원의 조정절차, 법원의 재판절차 등이 존재 한다. 당사자 합의에 의한 해결은 다른 무엇보다도 사적 자치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임의적 분쟁해결이므로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당사자 합의에 의한 해결이 외형에 그치거나, 공적인 절차에 의해 그 합의의 집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사적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은 당사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과 조정기법을 갖춘 조정인이 제시하는 공정 · 합리적인 대안이 당사자에 의해서 신뢰받기 때문에 공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밟는 경우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부담도 피하고, 개인의 경솔한 판단에 의해 불합리하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순한 합의에 쉽게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는 그와 같은 조정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조정전문가의 풀(Pool)이 존재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근로감독행정에 의한 분쟁해결은 무엇보다도 신속성 · 이용의 편의성 · 비용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절차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건이 근로감독행정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지만,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노동위원회에 의한 분쟁해결은 독립된 행정기구의 지위에서 노동위원회가 판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조정과 중재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이행방법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갖는 집행력과 기속력이 인정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법원의 재판 절차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분쟁해결절차로서의 가장 큰 특징이다. 다만, 권리구제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권리구제의 신속성에 단점이 있으며,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정인섭, 2005: pp. 8-13). 하지만, 권리분쟁의 경우 대부분이 법 또는 단체협약상의 권리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권한을 가진 판정적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이 노동자와 사용자를 구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¹⁰⁾도 존재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분쟁의 해결 시 소송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3) 각국 법원의 노동분쟁 심사범위

한편, 법원에 의한 노동분쟁의 해결은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즉 일반적 노동관계분쟁을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노동법원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독일), 특정 노동관계분쟁만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법원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개별적 권리분쟁과 관련된 사안만을 다룰 수 있는 경우로서 프랑스, 고용관련문제만을 다룰 수 있는 경우로서 영국, 집단적 권리분쟁에 대한 사안만을

10) 이철수·박은정(2005),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노동법연구, 제 18호. p. 75

다를 수 있는 경우로서 스웨덴), 노동법원이라고 특화된 법원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법원의 특별담당부서를 조직하여 일정한 노동관계분쟁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1998년 법 개정 이전 이탈리아 법무관(paetore=praetor)제도), 완전히 일반적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노동분쟁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네덜란드), 특정한 노동분쟁사건에 대해서만 민사소송의 절차에 의하게 하는 경우(부당노동행위사건 이외의 권리분쟁사건에 대하여 한국 및 일본) 등으로 구분된다(이철수·박은정, 2005: p. 75).

3. 분쟁해결 절차에서 소송수단 사용의 의미

분쟁절차의 해결에 있어서 소송 수단의 사용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황승흠(1996)에 따르면 분쟁에 법기관이 동원되는 것은 법기관이 가지는 ‘사회적 힘’이 분쟁과정에 투입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때문에 이 경우 분쟁당사자의 권력관계 이외에도 법기관의 권력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법기관의 동원은 신중한 전략적 선택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기관의 동원은 몇 가지 위험 부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먼저 법기관에 적용되는 절차적 규율에 따라야 하며, 이는 법원에 제기된 소송이 전적으로 형식적인 법규범에 의해 다시 평가되므로 원래의 맥락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해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한다. 또한, 법기관이 주로 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심판’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승패에 따라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법기관의 동원은 상당한 비용문제를 수반한다고 한다. 이러한 위험부담을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분쟁당사자는 법기관을 동원하며, 법기관의 동원은 분쟁당사자간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덧붙여 법기관을 동원하는데 있어서는 법기관의 이용에 친숙한 분쟁당사자가 더 유리할 것이라고 한다. 갈란터는 법원이용자를 ‘반복실행자(repeat-performer)’와 ‘일회이용자(one-shooter)’로 구분하였다고 한다(Galanter, 1974).¹¹⁾ 그의 분석이 보여주는 것은 법원이용의 경험이 많은 이용자, 즉, ‘반복실행자’가 법원을 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법기관을 동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분쟁경험과 법지식이 필요하다. 처음 분쟁을 겪는 ‘일회이용자’의 입장에서 법기관의 동원을 전략으로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반복실행자는 분쟁경험과 법지식을 활용하여 법기관을 적절히 동원함으로써 분쟁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황승흠, 1996: pp. 87-90).

하지만 갈란터의 기준에 따를 때 ‘일회이용자’인 근로자가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송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노동분쟁의 특징이 무엇인지, 어떠한 사회 · 경

11) 갈란터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법원은 일상적으로 법원을 이용하는 임대인, 사업가, 대기업은 거의 변호사와 접촉해 보지 못했고, 법적 투쟁에 참여해 보지 못한 임차인, 소비자, 개인보다 더 선호한다. 반복실행자는 대부분이 사회적 강자(“have”)이다. 그들은 종종 법원에 나가고,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하며, 법원의 절차나 판사, 그리고 법원직원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반복실행자들은 장기적인 법적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므로, 법원의 절차나 결정이 유리하게 바뀌어 질 때까지 막대한 자원을 투입할 수 있다. 반면에 일회이용자들은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들(“have nots”)이다. 이들은 법정에 들어가 본적도 없고, 법원의 절차도 이해하지 못하며, 잘 아는 변호사도 없다. 일회이용자들은 법원의 절차나 규칙의 장기적인 변화를 기다릴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회적인 승리를 목적으로 한다(Galanter 1974 :97-114). - 황승흠(1996), 각주 47을 재인용

제적 요소가 법적 지식이 부족하고,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노동자들에게 소송 수단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1. 국내 관련 선행연구

(1) 소송수단 사용에 대한 질적 연구

분쟁해결 과정에서 소송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주목한 것은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1990년대 초반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서 법률운동의 실천적 성격의 글들이 다수를 차지하였고(임정현 1992; 조국 199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4), 87년 이후의 노동분쟁을 중심으로 분쟁에서 법의 동원을 분석한 연구(황승흠, 1996)도 존재한다. 다만 이 연구는 노동분쟁의 특수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법과 분쟁해결’이라고 지칭되는 분쟁으로서의 일반적인 성격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분쟁일반론’을 탐구하는 입장에서 분쟁의 구체적인 분야 중 하나인 노동분쟁을 연구한 것이다.

황승흠(1996)은 민주화 이후 노동분쟁은 분쟁당사자가 점차적으로 국가법을 준수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노동분쟁이 국가의 형사법적 통제에 의하여 ‘종결’되는 것은 분쟁당사자 간의

대립이 격화되었다는 점 이외에도 제삼자가 분쟁해결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분쟁에서 법의 동원’에서 보여주는 법 현실은 분쟁당사자가 ‘법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산업화와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서 권리의식은 향상되고 있는 반면에,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 연유한 법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87년 이후 노동분쟁질서의 형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분쟁과정에서 법의 동원은 국가의 형사법적 통제에 대응하여, 노동조합이 교섭력 강화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측의 법동원의 효과를 노조 측의 법의 역동원을 통해서 상쇄시킴으로써 합법쟁의를 사업장에 정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이와 같이 사업장에 합법쟁의가 정착하는 듯이 보이는 현상은 노사양측의 규범의식의 성장 때문이 아니라 ‘분쟁에서 법의 동원’이라는 상황적 적응의 과정 때문이며, 권위주의체제 보다는 87년 이후라는 상대적으로 민주화가 진전된 시기에 법의 동원이 확대되는 이유는 법 규범에 대한 전략적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황승흠, 1996: pp. 155-156).

황승흠(1996)의 연구는 분석의 주 단위가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강화되고,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의 갱신 때마다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 역시 ‘반복실행자’의 입장에 서게 되고 이러한 인적 물적 자원과 경험의 축적이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의 법의 동원에 대응하여 노동조합의 법의 역동원을 가져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근로자 개인의 법의 동원, 즉 소송수

단 사용에 영향을 준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사회 경제적인 변수들의 영향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공익소송’의 긍정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소송을 시민사회의 ‘운동의 수단’으로써 바라보는 일련의 연구들이 존재한다. 홍일표(2008)에 따르면 소송과 입법청원 등 법률 전문가의 적극적 역할을 필요로 하는 운동수단들이 사회운동, 특히 ‘시민운동’ 조직들에 의해 선호되었고, 그것은 실제로 적지 않은 가시적 성과들을 도출하였다(참여연대 공익법센터 2000; 김진, 이상희 2002)고 한다. ‘소송’은 어떠한 구조적 조직적 조건 하에서 사회운동의 주요 레퍼토리로 사용되는 것이며, ‘소송’이라는 수단의 활용이 사회운동에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그동안 공익소송운동을 주도해 왔던 세 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송’이라는 운동 레퍼토리의 구성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민운동의 대표적 운동 레퍼토리였던 ‘소송’은 2002년을 기점으로 이를 가장 주도적으로 구사해 오던 참여연대 등에서 사용빈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였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입법운동’과 ‘공익소송’을 주도해 왔던 주요 사회운동조직들의 사회적·정치적 위상이 점차 강화되면서, 거의 아무런 제도적 구속력도 갖지 않는 입법청원 대신 의원발의를 통해 손쉽게 법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시킨다거나, 오랜 시간과 불확실성이 높은 소송 대신 보다 직접적인 면담이나 위원회 참여 등의 방식이 가능해지고, 선호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홍일표, 2008: pp. 39-57). 이와 더불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모두 향후 헌법재판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¹²⁾ 즉 공익소송이나 운

동 레퍼토리로써 헌법재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2) 소송수단 사용에 대한 양적 연구

거시경제 변수가 소송의 숫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 연구는 송승준(2008)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며 이 연구는 증권집단소송의 발생요인을 분석한 것으로, 증권집단소송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제도의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증권집단소송법의 남소방지규정, 회계의 부정적 처리 추세, 불공정증권거래행위의 추세 등을 중심으로 증권집단소송의 발생요인을 분석하였다. 한편 김두열(2012)은 경제성장과 사법정책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 민사소송을 대상으로 소송장기화의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사건처리기간을 중심으로 그 추이를 살펴본 연구가 존재한다.

분쟁 해결에 있어서 ‘법의 동원’을 역사적, 규범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국내 문헌은 상당히 존재하는 반면에,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시 변수들이 분쟁 해결에 있어 소송 수단을 사용하게 하는지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3) 노동분야와 관련된 양적 연구

12) 『헌법재판소 20년사』에 따르면, 1988년 26건에 불과했던 헌법소원 건수는 2007년 1,742까지 800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하였다(헌법재판소 2008).

노동분쟁에서 소송사용 수단에 대한 영향을 준 요인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렵지만, 노동관련 분야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이나 노동조합 가입을 종속변수로 하여 계량적 연구를 수행한 것은 비교적 많이 있다.

신광영(1995)의 연구는 OECD 16개국의 1970년부터 1985년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을 분석하였으며, 독립변수로 물가, 임금, 실업률 등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고용구조의 특징을 포착하기 위하여 전체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2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노동력 규모는 잠재적인 노동조합 조직이 가능한 집단의 규모로써 자영업자를 제외한 노동력 규모를 포함시켰다. 정치적 요인으로서는 좌파정당의 지배력을 측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캐머론(Cameron, 1984)에 의해서 제시된 좌파정당의 지배력은 다수당으로서의 좌파정당이 의회를 지배하는 정도와 내각 중 좌파 정당의 비율을 수치화하여 조작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 제도 요인으로 실업보험 실시 여부와 노동조합 집중도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노동조합 조직률의 차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각국의 노사관계 제도였으며, 노동조합에 우호적인 좌파정당의 지배가 길수록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변동과 관련된 변수들은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지만 유의미의 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국가에 따른 영향력 편차가 너무 커서 경기변동이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에 미치는 인과적인 관계는 일반화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배종석(1997)은 OECD 9개국의 1950년에서부터 1985년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노동조합 가입률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고자 했으며, 노동조합 성장에 관한 실증분석에 있어서 초기 이론들은 주로 경기변동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경기변동을 변수로 삼은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계량화의 용이성 때문이며, 여러 실증 연구들에서 경기변동 관련 변수들과 노동조합 조직률이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한다(Bain & Elsheikh, 1976; Visser, 1988; Western, 1993).¹³⁾ 경제적 요인의 여러 변수들 중에서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실증연구들에 의해 강한 지지를 받아왔다고 한다. 노동조합 성장의 정치적 결정요인으로서 노동입법을 들고 있으며, 친노동자 정당의 의석비율을 대리 변수로 설정하였다. 통제 변수로는 쟁의 활동과 총노동력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연간 인플레이션은 노동조합 조직률에 정(+)'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으나, 친노동자 정당의 의석비율은 노동조합의 조직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나인강(2008)은 여성 근로자의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KLIPs)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일수록 노동조합 가입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의 경우 신분상의 불리함과 더불어 직장에 대한 낮은 귀속감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6세 이하의 자녀수는 노동조합 가입 의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요인으로는 45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 가입의향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13) 배종석(1997), 노동조합 조직률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OECD 9개국 (1950-1985)을 중심으로, 산업관계연구 제8권, pp. 360-361

따라서 직장 이동 확률이 낮아지고, 현 근무 회사와의 관계가 더 밀접하게 변화함에 따른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가입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업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시균, 김정우(2005)는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조합 조직률 차이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활용 하였다.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상용직을 정규직으로, 임시직과 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여 노동조합 가입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달의 노동조합 가입성향에는 성별, 교육, 연령, 근속과 같은 인적속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고용된 사업장의 규모, 직종, 산업과 같은 구체적 일자리의 속성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조직률의 결정에는 노동조합의 수요측면 요인보다는 노동조합의 공급측면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정홍준(2012)도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09년 3월 자료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엄격하게 분류하기 위하여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분류방식에 따라 고용계약의 정함이 없더라도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를 할 수 없는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통제변수로는 성, 연령, 평균임금, 산업, 기업규모, 직업, 교육수준, 근속년수 등으로 정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일수록, 연

력이 높을수록,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가입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그리고 산업별 차이보다는 기업수준의 특수성이 보다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노조가입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특수고용 비정규직이 직접고용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비해 노조가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노동자에 비해 임시직, 파트타임, 호출노동, 특수고용의 노조가입이 더 높았으며 파견용역노동자는 기간제 노동자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2. 국외 관련 선행연구

외국의 경우에는 거시경제의 변수와 소송의 숫자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 논문과 Working Paper가 보다 많이 존재한다. Siegeman and Donohue(1995)는 1969년부터 1989년까지 미 연방 법원 행정실의 고용차별 소송 건수, 원고 승소율 등을 바탕으로 경제변수와 고용소송(employment lawsuit)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인 경제침체는 실업률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는 고용차별 소송에서 원고 승소율을 설정하였다. 실업률은 소송 판결 건수보다 신청 건수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으며, 경제 성과와 고용차별 소송수는 음(-)의 관계에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Bachmeier, Gaughan, Swanson(2003)은 미국연방의 총 소송수와 거시경제 변수와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미국의 1960년에서 2000년까지의 연방법원 행정처의 commercial 소송과 개인(personal) 소송을 분석하고 있다. 이 기간은 3번의 경제 호황과 2번의 경제 불황이 있어서 경제 여건이 변화할 때 총 소송 숫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는 데 있어서 보다 좋은 자료를 제공한다고 한다. 독립변수는 미국 GDP, 소비, 실업률, 인플레이션, 미국 재무부단기채권할인율(3-month T-Bill)이며, 종속변수는 반독점, 파산, 계약 등의 소송건수로 설정하였다. 총 소송수에 영향을 미친 변수를 분석한 결과 인플레이션과 소비, 소득 등이 총 소송수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중에서도 인플레이션이 가장 강력한 정(+)의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따라서 미래의 총 소송수를 이러한 경제지표를 활용하여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Clemenzen, Gugler(2000)는 오스트리아에서 거시적 변수가 민사 소송 건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오스트리아의 1960년에서 1995년까지의 총 소송수와 경제발전과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독립변수는 1인당 GDP이며, 종속변수는 민사소송건수, 통제변수¹⁴⁾는 경제활동인구비율, 전체 인구 중 변호사 비중으로 설정하였다. 1인당 GDP는 1인당 소송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통합분석 결과 단기에는 부정적인 관계이나, 장기적인 분석에서는 긍정적인 관계로 분석이 되었다. 그 이유

14) 경제활동인구비율은 경제활동인구가 많을수록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되기 때문이며, 전체 인구 중 변호사 비중은 변호사가 많을수록 소송건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설정함.

로 경제가 호황일 때 계약건수가 늘어나게 되므로 관련 계약 관련 소송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Carmignani, Giacomelli(2010)은 변호사의 수가 민사소송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이탈리아의 103개의 주정부의 변호사 수와 민사소송 건수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독립변수는 변호사 수, 종속변수는 민사소송건수, 통제변수¹⁵⁾는 경제적 변수(1인당 GDP, 1인당 경제성장률), 사회적 변수(도시화의 정도), 사회적 자본(1인당 NGO의 수), 지방법원의 효율성(소송의 처리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이 연구에서는 변호사의 숫자와 총 소송의 숫자와 유의미한 긍정적인 관계를 발견하였고, 변호사의 숫자가 소송에 긍정적이고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Marco, Sichelman(2010)은 기존의 선행연구와 다르게 경기 변수와 특허소송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논문들은 경기 침체기에 연방법원의 민사 및 파산, 고용 관련 소송(employment litigation) 건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경기 침체로 인해 특허 소송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미국 연방대법원 연방사법센터 자료를 활용하여 1970년에서 2009년까지 분기별 특허 침해 소송 건수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경기침체(실질GDP, 생산성(제조업 생산량), 나스닥지수, 개인소비, 미국재무부단기채권 할인율, 인플레이

15) 통제변수로 삼은 변수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언급하면 ① 도시화정도 : 도시화가 클수록 갈등이 증가하고 개인 간 거래가 많아져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짐, ② 1인당 NGO의 수로 측정 - 사회적 자본이 클수록 소송이 줄어들 수 있음 ③ 지방법원의 효율성(소송기간으로 측정) - 소송 기간이 길수록 소송건수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이유로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고 한다.

선, 실업률이고, 종속변수는 특허건수 변화율, 통제변수는 특허 허가건수와 특허 신청건수로 하였다. 분석 결과 실질 GDP, 나스닥 지수, 실업률은 특허건수 변화율에 음(-)의 영향을 주었으며, 미재무부 단기채권할인율과 소비는 특허건수 변화율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3. 소결

노동분야와 관련된 양적 연구에서 주로 알아보고자 한 변수는 노동조합의 조직률이었으며, 이러한 노동조합 조직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고용구조의 특징을 들고 있으며 2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을 대리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몇몇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조직형태인 기업별 노동조합이 노동분쟁의 해결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아지고 노동조합원의 수가 감소하면서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수행하고 있던 분쟁해결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므로 공적인 노동분쟁해결제도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¹⁶⁾

한편, 외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고용관련 소송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변호사의 수, 총소송 수, 경기변수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관련 소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가운데서 여러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노동조합 가입자

16) 정인섭(2005), 노동분쟁해결제도 ; 노동분쟁의 특수성과 노동법원의 전문성, pp. 7-8, 노동분쟁해결제도(200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p. 8

수’, ‘3차 산업종사자 비율’, ‘변호사 수’, ‘실업률’, ‘비정규직 비율’ 등을 독립변수로 삼아 여러 가설들을 세우고, 이를 사법연감과 각종 사회·경제적 지표에 대한 통계들을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1절 연구문제의 선정

본 연구는 앞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어떤 사회 · 경제적인 변수들이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수단 사용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변수들의 추세를 분석하여 향후 노동관련 소송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해 보고, 그 사법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제2절 변수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노동 관련 소송이며, 우리나라의 법원을 통한 노동분쟁은 크게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으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사 1심 본안소송의 임금소송과 손해배상-산업재해 소송에 국한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2. 독립변수

(1) 노동조합 가입자 수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결성된 조직이다. 노동조합의 기능 및 역할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의 집단적인 교섭력이 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 개선, 고용보호에 효과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조직되고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는 노동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 직접 분쟁해결 수단을 강구하고 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근로자 개인의 권익 보호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분석 대상의 광역시·도에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가 많으면 노동분쟁에서 소송수단을 사용하는 대신 노동조합을 통한 해결을 시도할 것이다. 지역별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 현황」에서 자료를 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광역시·도에 존재하는 노동조합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의 숫자가 더 유의미하다고 판단되어 독립변수로 삼았다.

(2) 3차 산업 종사자 비율¹⁷⁾¹⁸⁾

최근의 고용동향은 전통적인 1차 산업과 2차 산업에서 고용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3차 산업 이상의 서비스 산업에서 많은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 임업, 광업 등의 1차 산업은 현대사회의 고용 근로계약 관계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자영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조업의 2차 산업은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 대규모 집단 근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제조업 분야의 근로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분야의 3차 산업 근로자는 고용 근로계약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제조업 분야와 같이 획일적인 근로조건이 아니라 다양한 근로조건 하에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업의 유연한 인력정책과 맞물려 근속연수가 짧고 해고와 채용이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노동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의미 있는 변수이며,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서 추출하였다.

-
- 17) 분석대상인 2003년에서 2011년까지 사업체노동력실태현황의 산업분류는 7차에서 9차까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3차 산업의 종사자 비율은 해당 지역의 전체 종사자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종사자를 제외한 인원을 전체 종사자로 나누었기 때문에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산업분류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였다.
- 18) 김영범, 박준식(2011)의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 분석의 연구에서 노동시장 관련 변수로 실업률 및 서비스업 근로자 비율, 공공부분 비율, 여성 노동력 비율 등을 주요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파트타임 고용 비율의 변화와 제조업 고용 비율의 변화 등을 변수로 사용한 바 있다.

(3) 변호사수

노동분쟁에서 소송수단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특히 노동분쟁과 관련한 노동전문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와 같이 노동자들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정보의 접근 가능성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즉, 법적 자원의 전달 네트워크가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어느 정도로 구축이 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수단 사용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호사의 수는 노동자에게는 법적 자원의 접근 가능성이 되는 동시에 법원의 소송에 대해서는 공급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변호사의 수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모든 종류의 소송이 아닌 노동분쟁에서 소송수단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노동 분야에 특화된 노동전문 변호사의 숫자가 더 유의미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전문 변호사¹⁹⁾를 일반 변호사들 사이에서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숫자가 본 논문의 분석 단위인 16개 광역시·도별로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19) 한편, 과거 사법연수원의 ‘노동법학회’가 비공식적 프로그램으로써 노동전문변호사의 인적 pool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가 존재하여, 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노동전문변호사의 숫자를 파악하고자 하였지만, 2013년도 사법연수원의 노동법학회의 회원 인터뷰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노동법학회의 회원 수가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것이 아니며, 현재에는 노동전문변호사의 인적 pool를 제공하는 기능은 의미가 많이 상실되었다고 한다(참고로 2014년 수료 예정인 43기 사법연수원생은 약 790명이고, 그 중 노동법학회의 회원의 등록 회원은 28명, 실제 활동인원은 10명이다). 추가로 한국노동법학회에 등록된 변호사의 숫자를 파악해 보려고 하였으나, 역시나 공식 통계가 집계되고 있지 않으며, 실제 활동하는 회원과 회원 가입만 한 명목상의 회원이 구분되지 않아 노동전문변호사의 수를 추출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것이 없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지역별로 개업한 변호사의 숫자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자료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법무부 법무정보」를 이용하였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자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4) 실업률

실업률은 전통적으로 경기 변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수이다. 그리고 노동 분쟁과 관련해서는 실업률이 높을 때 경기가 불황이고, 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미지급 된 임금이 있다면 사업주에 대해서 민사사상의 임금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역별 실업률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국가통계포털의 「e-지방지표」 지역별 실업률 자료를 활용하였다.

(5) 비정규직 비율

양동훈(2009)의 분석에 따르면 기업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여 고용차별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기업들이 노동유연화를 선호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고용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 간의 공정처우 위반이나 계약갱신 거부 등의 분쟁

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한다.²⁰⁾ 또한 여러 노동조합 조직을 변화 분석에서 노동시장을 분석하는 주요 지표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사용되고 있다. 고용시장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다르게 다양한 유형의 근로계약이 존재하며,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계속 개정이 되면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의 차별 금지 영역이나 권익사항을 법과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러한 권리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결국 소송수단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중요할 수 있다. 해당 자료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시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에서 추출하였다.

2. 통제변수

(1) 민사 1심 총소송수²¹⁾²²⁾

20) 양동훈(2009), 개별 노동분쟁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경영논총 제20집 2호, p. 120

21) 2011년을 기준으로 민사 1심 접수사건의 총 수는 985,533건이다. 이 중에서 소액사건이 690,239건이고, 민사 1심 접수사건을 사건의 종류별로 분류할 때 소액사건은 제외된다. 따라서 민사 1심의 접수사건을 종류별로 분류한 것은 295,294건이다. 현재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소가 2,000만원 이하의 사건들이다. 총 690,239건의 소액사건들이 분석되지 못한 것은 연구의 한계이다.

22) 민사 1심에서만 소액사건이 69만 건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소액사건을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업무상 과

단순히 민사소송이 급증하거나 급감하는 경우 노동관련 소송도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도별, 지역별 민사 1심 총 소송수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민사 1심 총소송수는 법원행정처의 각 연도별 「사법연감」 자료를 참고하였다.

(2)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본 연구에서 노동분쟁과 관련된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 소송이 종속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상승하면 근로자가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승하므로 소송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상승이 되었으며, 본 연구의 분석단위인 광역시·도별로 평균임금은 집계되지 않았다. 국가 수준에서의 평균임금만 집계되었으므로, 지역별 총GDP나 지역별 1인당 GDP는 집계되었으나 이는 자영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계층의 소득을 포함하는 정보라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전국단위의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을 통제변수로 삼고자 하였고, 「통계청의 가계소득지출 - 가계동향조사(신분류)」에서 근로자

중을 이유로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종류별 분류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이 어떠한 분야의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지를 파악하는 것은 소송수단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 정책의 수립이나 사법정책, 사법 통계 연구 수행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구의 근로소득만 따로 추출하였다.

<표 1> 변수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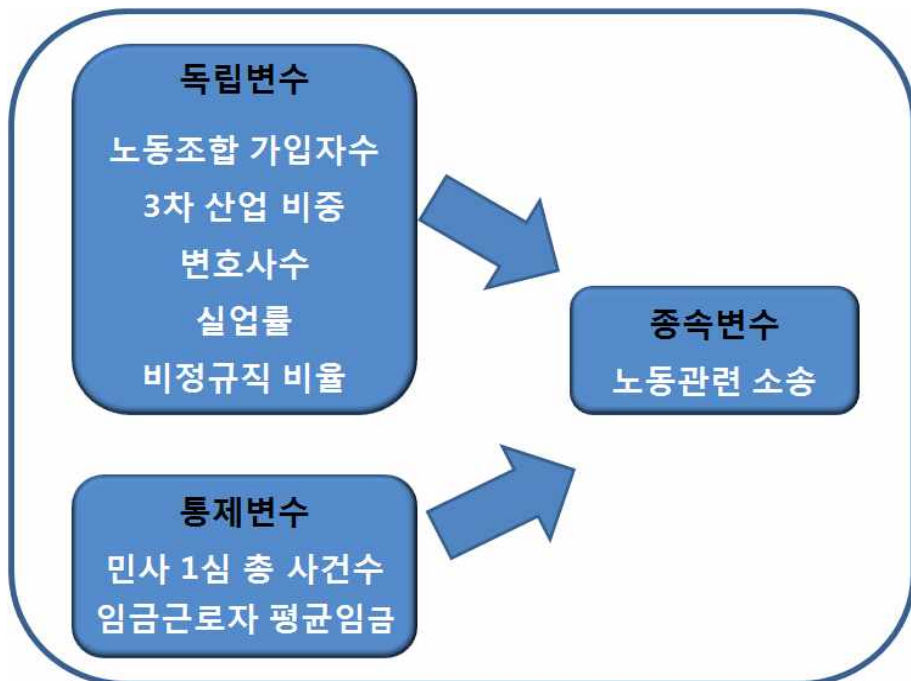
	변수명	정 의
독립변수	Union_emp	노동조합 가입자 수
	Ser_ratio	3차산업 종사자 비율
	Lawyer	변호사수
	U	실업률
	Temp_ratio	비정규직 비율
종속변수	L_suit	노동관련 소송
통제변수	T_suit	민사 1심 총사건수
	Aver_W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제3절 연구의 분석틀과 가설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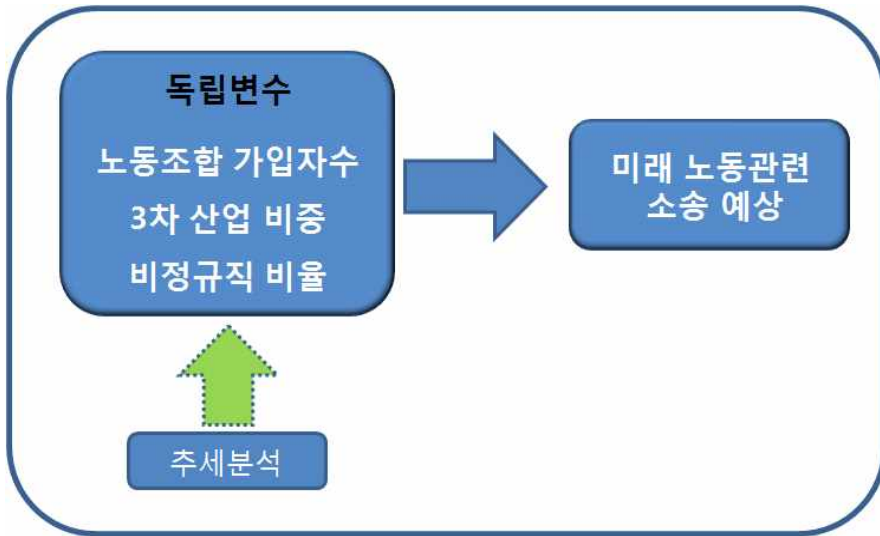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형을 가지고 앞서 설명한 변수들이 노동분쟁에서 소송수단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I



<그림 2> 연구의 분석틀 II



또한 연구 분석틀 I 에서 나타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토대로, 유의미한 독립변수들에 대한 시계열 추세분석을 통하여 향후 노동관련 소송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에 보고 이에 대한 사법정책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2. 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노동분쟁 발생 시 사회·경제적인 변수들이 소송 사용 수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려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기로 한다.

가설 1: 노동조합 가입자의 숫자가 감소할수록 노동관련 소송은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배적인 조직형태인 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 내에서의 노동분쟁의 해결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단체협약의 적용이라는 직접적인 방법도 있지만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을 통한 개별 근로자의 고충처리라는 간접적인 방법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의 저하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다. 노동조합의 조직률 저하는 노동분쟁 발생 시 노동조합에서 수행하고 있던 분쟁해결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근로자 개인이 공적인 노동분쟁해결제도를 선택함에 따라 공적인 노동분쟁해결수단 중 하나인 노동관련 소송은 증가할 수 있다.²³⁾ 따라서 노동조합 조직률이나 해당 광역시·도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가 하락할수록 노동관련 소송은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보고 검증해 보도록 할 것이다.

가설 2: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증가할수록 노동관련 소송은 증가할 것이다.

산업을 고도화 되고 지식 노동이 심화·확대 될수록 근로관

23) 정인섭(2005), 노동분쟁해결제도 ; 노동분쟁의 특수성과 노동법원의 전문성, pp. 7-8, 노동분쟁해결제도(200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p. 8

계를 둘러싼 조건은 다양화 될 것이고, 이러한 다양한 개별적 근로조건의 체결 및 해석, 분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노동 분쟁에 대하여 소송 수단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증가하면 노동 관련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가설 3: 변호사 수가 증가할수록 노동관련 소송은 증가할 것이다.

변호사 숫자의 증가는 근로자들이 법적 자원전달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게 된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 공급의 증가는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되게 한다. 따라서 변호사 수의 증가는 노동분쟁에서 소송수단 사용을 촉진시킬 것이며, 따라서 변호사 수가 증가할수록 노동 관련 소송은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가설 4: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노동관련 소송은 증가할 것이다.

실업률은 경기 변동과 매우 유의미한 변수이며, 실업률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경기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불황 시 기업의 지불능력은 악화되고,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어 지급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근로

자들이 미지급된 임금을 받기 위해 여러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그 수단 중의 하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노동관련 소송은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²⁴⁾

가설 5: 비정규직 종사자 비율이 증가할수록 노동관련 소송은 증가할 것이다.

비정규직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노동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준수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정규직에 비해서 높다. 또한 근로계약의 기간이 짧고 근로계약 체결과 해지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에 대한 노동분쟁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파트타임, 파견직, 기간제 계약직 등 다양한 유형의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이로 인한 근로자 간의 공정처우 위반, 계약갱신 거부 등의 노동 분쟁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비정규직 종사자 비율이 증가할수록 노동관련 소송은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24) 추가로 실업률이 높아져서 경기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더욱 더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적법한 해고가 아닌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게 되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문제로 종속변수에서 행정소송 건수는 제외하였기에 본 연구에서 실업률이 노동관련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평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싶다.

<표 2> 연구 가설의 정리

	연구 가설
가설 1	노동조합 가입자의 숫자가 감소할수록 노동관련 소송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2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증가할수록 노동관련 소송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3	변호사 수가 증가할수록 노동관련 소송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4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노동관련 소송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5	비정규직 종사자 비율이 증가할수록 노동관련 소송은 증가할 것이다.

제4절 연구의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모형

위의 가설에 따른 연구의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법연감과 정부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16개 광역시·도의 횡단면적 자료들을 결합한 144개의 패널자료(panel data set)을 사용하고자 한다. 패널자료는 횡단면 자료 및 시계열 자료에 비해 상당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횡단면 자료는 측정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포함되어야 할 독립변수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추정에 편의를 유발한다. 반면, 패널 자료(panel data)는 개별 관측치 간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다룰 수 있음

에 따라 제외된 변수문제(omitted variable problem)를 다룰 수 있다. 둘째, 패널자료는 횡단면적 자료와 시계열적 자료를 결합시킴에 따라, 다중공선성의 문제(multicollinearity problems) 경감시키며 동시에 더욱 큰 변이성(variability)을 얻을 수 있다. 셋째, 패널자료는 횡단면 분석 혹은 시계열적 분석 방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넷째, 시간경과에 따른 동태적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강점을 지니고 있다(Kennedy, 2003: 302, 민인식, 최필선, 2010: pp. 2-3).

즉, 패널 데이터를 통해 모형화하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수적인 것(unobserved effect)”와 “시간이 지나면서 이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는 “관측되지 않은 요소들(unobserved factors)”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유용하게 모델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수적인 것(unobserved effect)”은 각 광역시·도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하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지리적, 기후적 특성 등으로서 이들을 변수화해서 시계열자료 등에서는 반영하기 어려운 요인들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것”은 시계열자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오차항을 의미한다(최원익, 2006).

패널분석의 일반적 모형은 오차항(u_{it})의 통계적 특성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따라 합동 OLS 모형(Pooled OLS model), 고정효과모형(Fixed model), 확률효과모형(Random model) 등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

Pooled OLS model

$$Y_{it} = \alpha + \sum_{k=1}^k \beta_k X_{itk} + v_{it}, \quad E[\varepsilon_{it}] = 0 \quad \text{식(1)}$$

(Y=노동관련 소송, α =절편, k=독립변수 개수, i=16개 광역시도, t=2003~2011, β_k =독립변수 회귀계수, ε_{it} =오차항)

통합최소승자모형은 주어진 데이터가 패널구조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선형회귀모형의 추정방식이다. 합동 OLS가 합리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OLS 가정이 성립해야 한다.

- (가정 1) $E(\varepsilon_{it})=0$, 모든 i 및 t에 대해
- (가정 2) $\text{Var}(\varepsilon_{it})=\sigma^2$, 모든 i 및 t에 대해
- (가정 3) $\text{cov}(\varepsilon_{it}, \varepsilon_{js})=\sigma^2$, 모든 $i \neq j$ 및 $t \neq s$ 에 대해
- (가정 4) $\text{cov}(x_{it}, \varepsilon_{it})=0$, 모든 i 및 t에 대해

이상의 기본 가정이 위배되는 경우 OLS 추정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패널 데이터는 횡단면데이터와 시계열데이터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차항에 이분산성이나 자기상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OLS 추정량의 표준오차에 영향을 주어 비효율적인 추정량이 도출될 수 있다. 또한 식(1)에서 패널 개체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이 오차항 ε_{it} 에 포함되는 경우, 오차항과 설명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 누락된 변

수로 인한 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생기고, 그에 따라 OLS 추정량은 일치추정량이 되지 못하게 된다(민인식, 최필선, 2010: pp. 89~90).

합동 OLS 모형의 가정인 오차항과 독립변수가 서로 상관되어 있지 않다는 가정은 일반적으로 현실적이지 않고, 아울러 본연구의 자료와 같이 횡단면 단위의 수가 많은 반면에 시간 단위의 수가 적은 패널자료의 분석에서는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이 적합하다(Kennedy, 1992: p. 225)고 알려져 있다.

모형 1 : Fixed Effects Model

$$Y_{it} = \alpha + \sum_{k=1}^k \beta_k X_{itk} + u_i + \varepsilon_{it}$$

고정효과모형은 오차항이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즉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패널의 개체특성을 나타내는 u_i 와 시간과 패널 개체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항인 ε_{it} 로 구성되어 있다. 고정효과 모형은 오차항 u_i 를 확률변수(random variable)가 아니라 추정해야 할 모수(parameter)로 간주한다. 고정효과 모형은 상수항이 패널 개체별로 서로 다르면서 고정되어(fixed) 있다고 가정하고, 기울기 모수인 β 는 모든 패널 개체에 대해 서로 동일하지만, 상수항 ($\alpha+u_i$)는 패널 개체별로 달라진다(민인식, 최필선, 2010 : p. 123).

모형 2 : Random Effects Model

$$Y_{it} = \alpha + \sum_{K=1}^k \beta_K X_{itk} + u_i + \varepsilon_{it}$$

고정효과모형은 u_i 를 모수로 간주하지만 확률효과모형은 u_i 를 확률변수로 가정한다. 확률효과모형은 그룹 간(between) 정보와 그룹 내(within) 정보를 모두 사용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cov(x_{it}, u_{it})=0$ 이라는 가정이 성립할 경우 고정효과모형에 비해 확률효과모형의 추정이 더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고정효과모형에서는 패널개체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추정하기 때문에 패널 개체수만큼 자유도(df)가 손실되기 때문이다(정성호, 2013: p.158).

패널자료 분석에서 두 모형 중 어느 모형이 적합한지는 쟁점이 되어 왔다.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기준은 횡단면 단위들이 모집단 전체를 이루는 경우에는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하고, 횡단면 단위들이 모집단으로부터 무작위 추출된 경우에는 확률효과모형이 적합하다고 한다(kennedy 1992 : p.222, Yang & Miller, 2008 : p.588). 두 번째 기준은 Hausman 검증이다. Hausman 검정은 개별 효과들이 독립변수에 독립적이라는 영가설 하에서 양 모형을 비교하는 것으로서, 영가설이 기각될 수 없는 경우 확률효과 모형을, 기각되는 경우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한다(Yang & Miller, 2008 : p. 589).

따라서 본 연구는 합동 OLS 모형(Pooled OLS model)은 기본 가정이 너무 엄격하고 패널데이터의 기본 구조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석모형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그리고 고정효과모형(Fixed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model) 두 가지 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한 후,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 여러 기준에 따

라 판단해서 최선의 모형방식을 선택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노동분쟁에서 소송수단 사용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들은 시계열 자료 분석을 통하여 향후 노동관련 소송의 증감 여부를 예측해 보기로 한다.

제4장 분석결과²⁵⁾

제1절 기초통계량

1. 종속변수

먼저 종속변수인 노동관련 소송의 기초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 3> 노동관련 소송의 기초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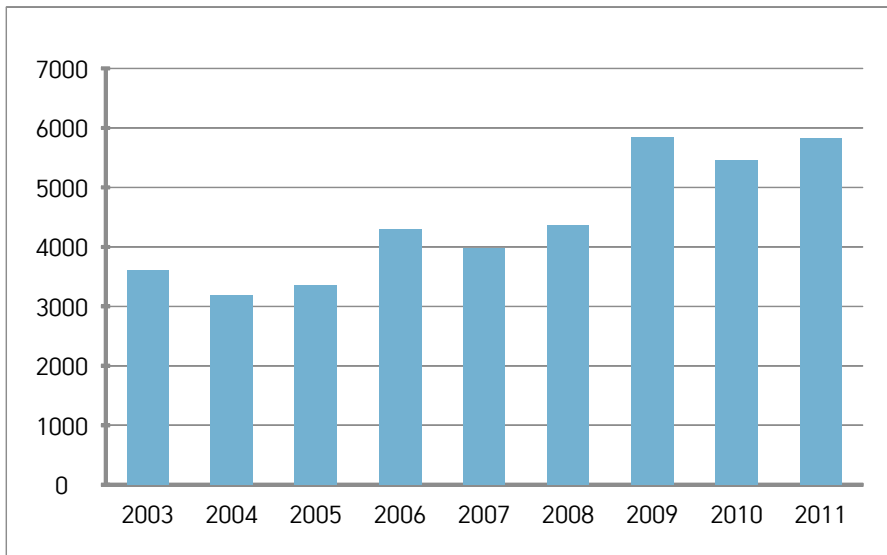
변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측치	
노동관련 소송	overall	277.35	337.57	9	1707	N =	144
	between		328.24	31	1257.33	n =	16
	within		110.62	-133.09	727.02	T =	9

16개 광역시·도의 노동관련 소송의 평균은 277건 이었다. 최솟값은 9건이며, 최댓값은 1,707건으로 최솟값과 최댓값의 차이가 크고 표준편차가 33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수도권, 특히 서울의 경우 인구를 비롯하여 많은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노동분쟁과 노동관련 소송이 많이 발생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인구수를 비롯하여 많은 사회 · 경제

25) 패널데이터는 StataIC 1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독립변수의 추세분석은 SPSS 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적 변수들이 적기 때문이다. 다음은 연구의 분석대상 기간에 전국 노동관련 소송의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그림 3> 2003년~2011년 전국 노동관련 소송수



종속변수인 노동관련 소송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단기간에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2003년~2011년 각 지역별 노동관련 소송수

광역시도	평균	표준편차	합계	전체 합계 퍼센트
서울특별시	1257.33	294.274	11316	28.3%
부산광역시	381.33	70.422	3432	8.6%
대구광역시	256.89	52.174	2312	5.8%
인천광역시	267.11	51.849	2404	6.0%
광주광역시	158.56	36.174	1427	3.6%
대전광역시	137.44	32.642	1237	3.1%
울산광역시	137.78	19.486	1240	3.1%
경기도	884.44	317.511	7960	19.9%
강원도	95.44	19.875	859	2.2%
충청북도	154.22	82.372	1388	3.5%
충청남도	104.00	32.588	936	2.3%
전라북도	140.33	44.942	1263	3.2%
전라남도	79.33	23.712	714	1.8%
경상북도	124.67	25.792	1122	2.8%
경상남도	227.78	80.717	2050	5.1%
제주도	31.00	14.620	279	.7%
합계	277.35	337.573	39939	100.0%

다음은 각 지역별 노동관련 소송의 평균과 표준편차,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한 표이다. 서울과 경기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두 지역의 평균의 표준편차도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울산광역시, 강원도, 제주도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고, 표준편차도 작아 비교적 노동관련 소송이 적게 접수되고 있다. 한 가지 눈여겨 볼만한 것은 일반적으로 노동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울산광역시의 노동관련 소송이 매우 적다는 사실이다. 울산의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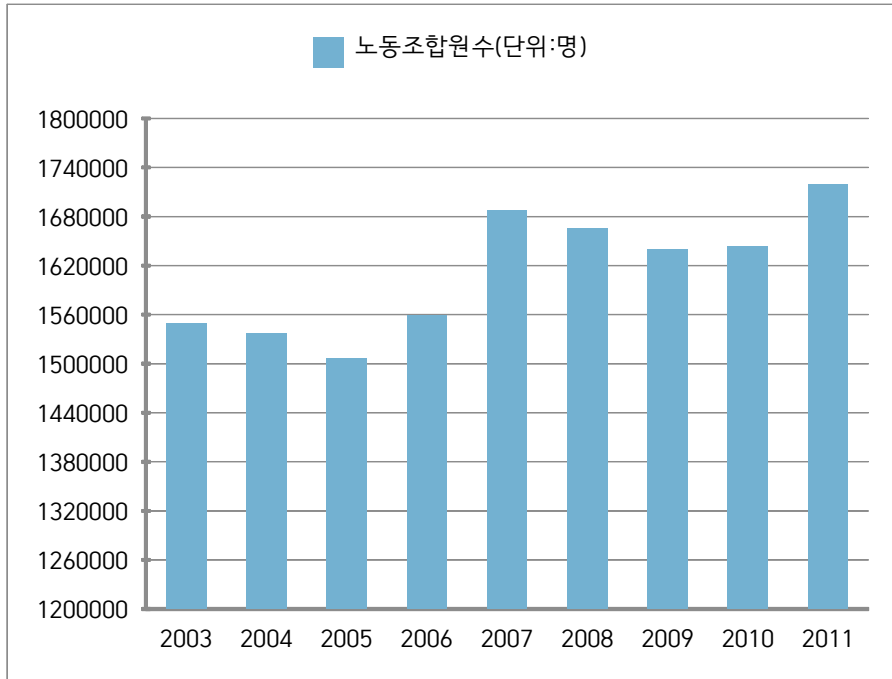
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아서 노동분쟁에 있어서 소송수단을 사용하
기 보다는 노동조합 등을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본다.

2. 독립변수

<표 5> 2003년~2011년 각 지역별 독립변수 통계

광역시도		노동조합원수	3차 산업 중사자비율	변호사	실업률	비정규직 비율
서울특별시	평균	950,282.56	.8953	5761.11	4.4778	.3737
	표준편차	108560.754	.03810	1458.15	.31535	.03295
	합계 퍼센트	58.9%	7.7%	63.5%	9.0%	6.5%
부산광역시	평균	66,441.44	.7886	339.22	4.0222	.3258
	표준편차	3401.502	.01629	35.825	.30732	.02150
	합계 퍼센트	4.1%	6.8%	3.7%	8.1%	5.7%
대구광역시	평균	34,625.56	.7377	335.22	3.9667	.3382
	표준편차	4024.374	.02914	17.584	.32016	.03542
	합계 퍼센트	2.1%	6.4%	3.7%	7.9%	5.9%
인천광역시	평균	39,035.22	.6344	265.00	4.4889	.3583
	표준편차	7014.577	.03329	46.615	.35512	.01445
	합계 퍼센트	2.4%	5.5%	2.9%	9.0%	6.2%
광주광역시	평균	19,871.44	.8100	210.89	3.9444	.3763
	표준편차	3274.114	.01310	21.647	.46128	.03088
	합계 퍼센트	1.2%	7.0%	2.3%	7.9%	6.5%
대전광역시	평균	38,531.33	.8587	247.33	3.9222	.3702
	표준편차	6194.345	.02649	42.462	.35277	.02934
	합계 퍼센트	2.4%	7.4%	2.7%	7.9%	6.4%
울산광역시	평균	59,389.78	.5608	80.56	3.3222	.2954
	표준편차	24776.024	.01451	19.755	.49694	.01972
	합계 퍼센트	3.7%	4.8%	.9%	6.7%	5.1%
경기도	평균	184,043.67	.6366	599.33	3.6222	.3206
	표준편차	20602.137	.03270	147.519	.27285	.02005
	합계 퍼센트	11.4%	5.5%	6.6%	7.3%	5.6%
강원도	평균	16,129.89	.8491	74.00	1.9444	.4267
	표준편차	756.199	.01130	8.185	.36094	.03200
	합계 퍼센트	1.0%	7.3%	.8%	3.9%	7.4%
충청북도	평균	27,941.44	.6389	77.67	2.3556	.3710
	표준편차	3652.449	.00553	8.031	.33582	.03165
	합계 퍼센트	1.7%	5.5%	.9%	4.7%	6.4%
충청남도	평균	26,492.33	.5851	247.33	2.5556	.3700
	표준편차	6759.084	.00970	42.462	.30459	.03495
	합계 퍼센트	1.6%	5.0%	2.7%	5.1%	6.4%
전라북도	평균	21,582.00	.7633	105.89	2.3667	.3748
	표준편차	1932.324	.00828	12.170	.25981	.02664
	합계 퍼센트	1.3%	6.6%	1.2%	4.7%	6.5%
전라남도	평균	23,802.89	.7529	210.89	2.0222	.4038
	표준편차	4116.904	.01529	21.647	.31136	.02221
	합계 퍼센트	1.5%	6.5%	2.3%	4.1%	7.0%
경상북도	평균	42,460.22	.5952	335.22	2.3889	.3311
	표준편차	7986.850	.01684	17.584	.28038	.02292
	합계 퍼센트	2.6%	5.1%	3.7%	4.8%	5.7%
경상남도	평균	56,625.56	.5696	144.22	2.5000	.2989
	표준편차	4200.852	.01078	15.344	.27839	.02743
	합계 퍼센트	3.5%	4.9%	1.6%	5.0%	5.2%
제주도	평균	4,866.00	.9309	31.78	2.0111	.4291
	표준편차	1126.071	.00501	4.236	.32189	.03168
	합계 퍼센트	.3%	8.0%	.4%	4.0%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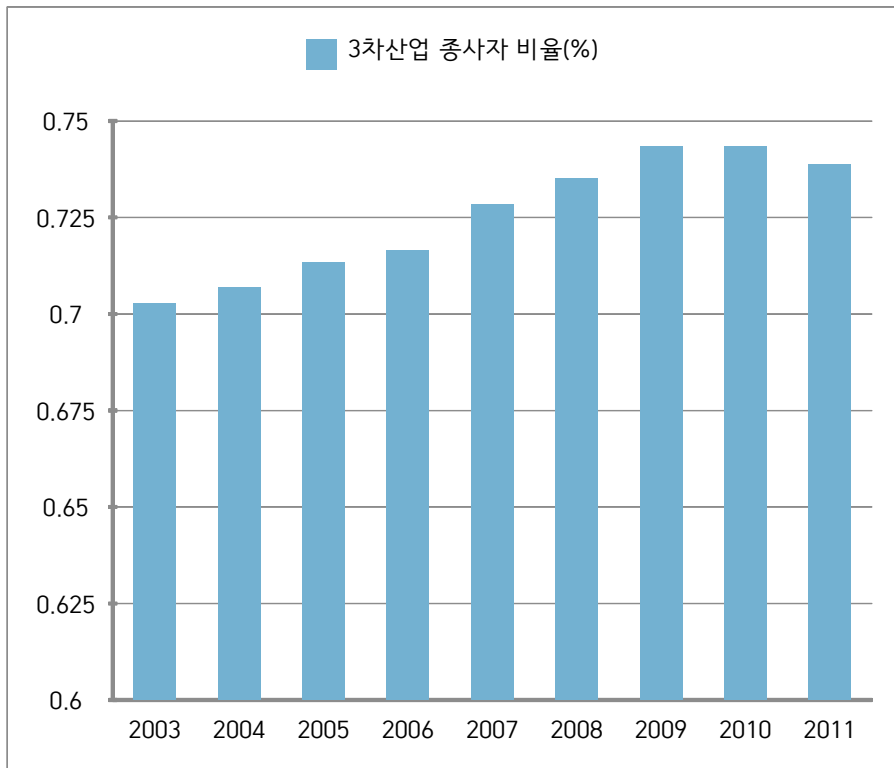
<그림 4> 2003년~2011년 노동조합원수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노동조합 전체 가입자의 58.9%가 서울특별시에 몰려있고, 경기도를 제외하면 전체 노동조합원 대비 5% 이상 가입된 광역시·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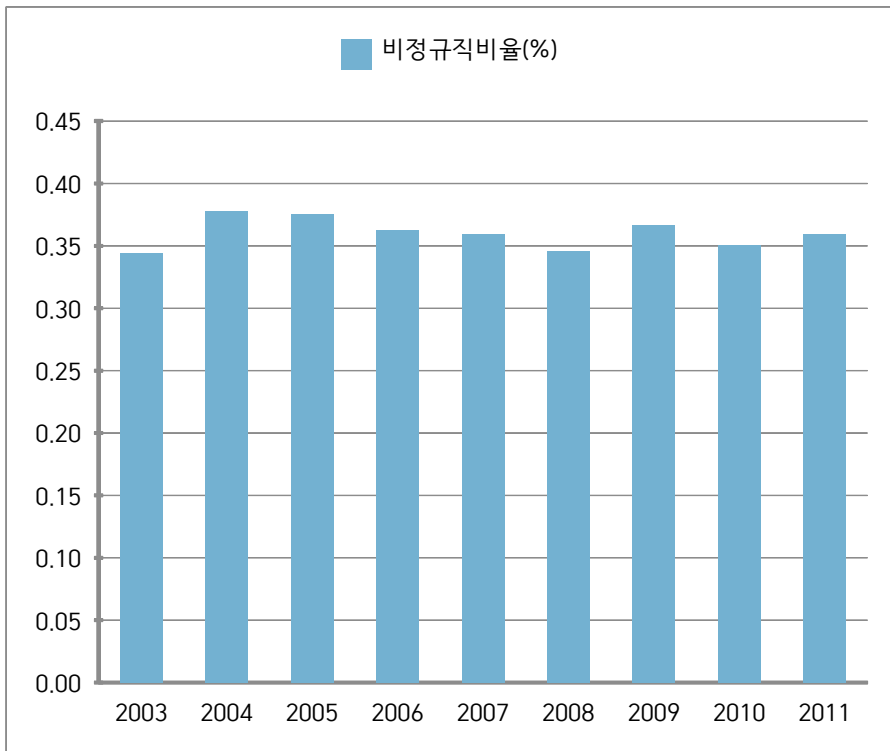
변호사의 숫자는 모든 지역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다른 어떤 변수보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가 높았다. 전체 대비 63.5%가 서울특별시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편 변호사의 숫자는 향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변호사들이 시장에 진입한다면 과거보다 큰 폭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변수이다.

<그림 5> 2003년 ~ 2011년 3차산업 종사자 비율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점진적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다가 2011년에 조금 하락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높은 9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숫자가 많기 보다는 1, 2차 산업의 비중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숫자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면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90%)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남도(57%)이다.

<그림 6> 2003년~2011년 비정규직 비율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점진적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다가 2011년에 조금 하락하였다. 비정규직 비율을 지역별로 조금 살펴 보면, 강원도(43%)와 제주특별자치도(43%)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울산광역시(30%)와 경상남도(30%)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강원도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비해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고용의 질이 보다 양호하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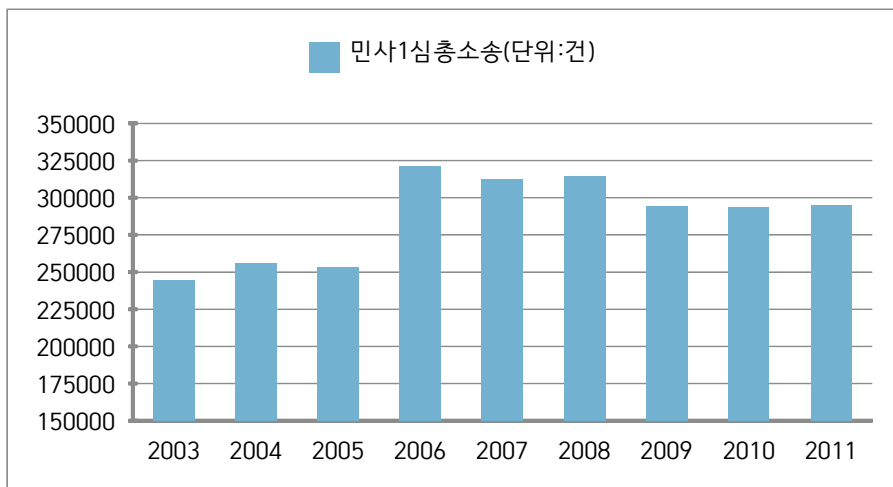
3. 통제변수

<표 6> 2003년~2011년 각 지역별 통제변수 통계

변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측치	
민사 1심 본안총소송	overall	17951.67	23818.03	2550	106959	N =	144
	between		24287.07	2906.22	99095.78	n =	16
	within		3230.466	2548.55	26054.56	T =	9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overall	3059741	357591.4	2505162	3612783	N =	144
	between		0	3059741	3059741	n =	16
	within		357591.4	2505162	3612783	T =	9

소액사건을 제외한 민사1심 본안 소송은 2006년 급격하게 증가한 이래 조심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34.5%)과 경기도(17.3%)의 비중이 전체의 과반수를 넘고 있다.

<그림 7> 2003년~2011년 민사1심 총본안소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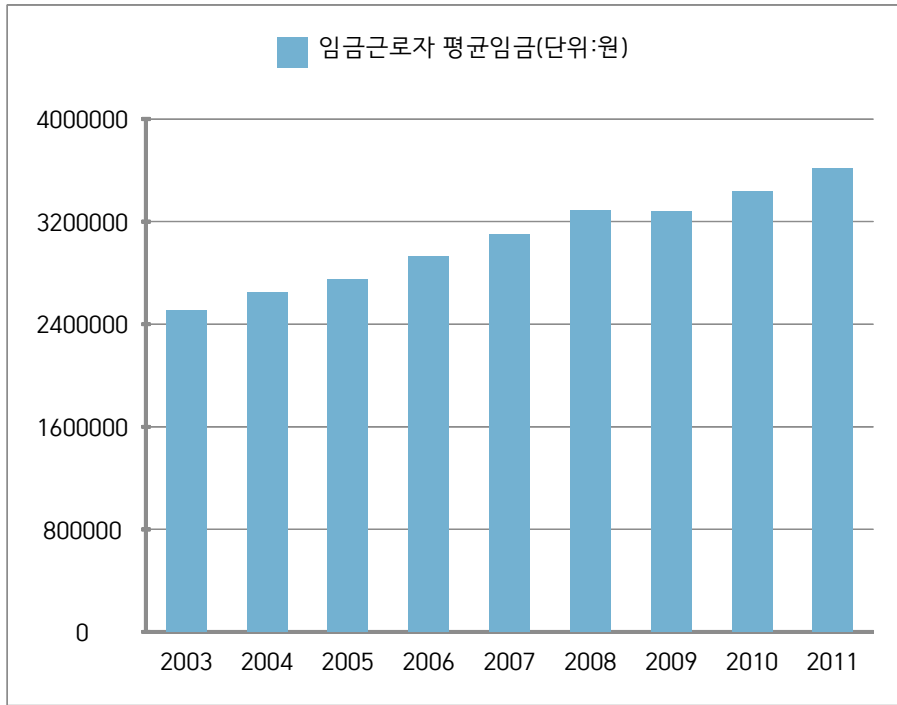


<표 7> 2003년~2011년 각 지역별 민사1심 총본안소송수 통계

광역시도	평 균	표준편차	합 계	전체 합계 퍼센트
서울특별시	99,095.78	8,981.370	891,862	34.5%
부산광역시	22,624.00	2,773.379	203,616	7.9%
대구광역시	16,476.22	2,041.201	148,286	5.7%
인천광역시	14,424.00	1,624.451	129,816	5.0%
광주광역시	11,133.22	1,370.914	100,199	3.9%
대전광역시	8,533.78	945.760	76,804	3.0%
울산광역시	5,537.00	871.841	49,833	1.9%
경기도	49,681.11	9,024.854	447,130	17.3%
강원도	6,915.56	760.372	62,240	2.4%
충청북도	6,063.78	887.125	54,574	2.1%
충청남도	8,248.22	1,031.332	74,234	2.9%
전라북도	9,273.44	1,050.997	83,461	3.2%
전라남도	6,963.89	573.773	62,675	2.4%
경상북도	6,995.78	754.614	62,962	2.4%
경상남도	12,354.67	1,354.545	111,192	4.3%
제주도	2,906.22	362.110	26,156	1.0%
합계	17,951.67	23,818.030	2,585,040	100.0%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국가수준의 지표로써 2003년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림 8> 2003년~2011년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4.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표 8>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노동 조합원수	3차 산업 종사자 비율	변호 사수	실업률	비정규직 비율	민사1심 본안 총소송	임금 근로자 평균임금
노동 조합원수	1.0000						
3차 산업 종사자 비율	0.2979	1.0000					
변호사수	0.9781	0.3472	1.0000				
실업률	0.4053	0.0884	0.3945	1.0000			
비정규직 비율	-0.0197	0.5693	0.0195	-0.256	1.0000		
민사1심 본안총소송	0.9424	0.2585	0.9083	0.4956	-0.0943	1.0000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0.0172	0.1172	0.0800	-0.102	-0.0639	0.0477	1.0000

각 변수들 간의 변이가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변수 간의 원인과 결과가 따로 주어지지 않고, 단지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분석방법이다. 분석 결과 노동조합원수와 변호사수, 민사 1심 본안총소송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의 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구한 것이기 때문에 유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부 변수들 간의 강한 상관관계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패널 데이터에서 자기상관을 검정하는 Wooldridge 검정을 통해서 이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제2절 각 모형별 분석결과

1. 양 모형의 비교

<표 9> 고정효과모델과 확률효과모형의 분석결과 비교

변 수		Fixed Effect Model		Random Effect Model	
		Coef.	유의 확률	Coef.	P > z
노동조합원수		-.0014836	0.000	-.0012287	0.000
3차 산업 종사자 비율		1001.271	0.041	-100.2798	0.189
변호사수		.1790529	0.000	.0981987	0.000
실업률		50.65575	0.011	.6747774	0.939
비정규직 비율		-605.5657	0.006	-547.4688	0.005
R-Square	within	0.6961		0.6107	
	between	0.7447		0.9864	
	overall	0.7394		0.9461	

두 모형 모두 R-Square 값이 0.6을 넘어 모형의 설명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고정효과 모형은 독립변수들이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만, 확률효과 모형에서는 ‘3차 산업 종사자 비율’과 ‘실업률’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모형 중에 어떤 모형이 본 연구에 적합한 모형인지 기존의 연구들이 채택했던 방법을 통해서 판단해 보고, 최적으로 판단된 모형의 분석 결과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한다.

2. 모형의 선택 기준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지는 크게 2가지 기준이 존재한다. 첫 번째 기준은 횡단면 단위들의 모집단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이다. 횡단면 단위들이 모집단 전체를 이루는 경우에는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하고, 횡단면 단위들이 모집단으로부터 무작위 추출된 경우에는 확률효과모형이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16개 광역시·도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기에 첫 번째 기준에 따를 때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하다. 두 번째 기준은 Hausman 검증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 Hausman 검정은 개별 효과들이 독립변수에 독립적이라는 영가설 하에서 양 모형을 비교하는 것으로서, 영가설이 기각될 수 없는 경우 확률효과 모형을, 기각되는 경우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한다 (Yang & Miller, 2008; p. 589, 민인식, 최필선, 2010; pp. 193-194). 다음 <표 10>는 Hausman 검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10> Hausman 검정 결과

	(b) fe	(B) re	(b-B) Difference	sqrt (diag(V_b-V_B)) S.E.
Union_emp	-.0014836	-.0012287	-.0002549	.0002801
Ser_ratio	1001.271	-100.2798	1101.551	477.5173
Lawyer	.1790529	.0981987	.0808542	.0172926
U	50.65575	.6747774	49.98097	17.41889
Temp_ratio	-605.5657	-547.4688	-58.0969	98.97944
T_suit	.0123795	.0191277	-.0067481	.0020635
Aver_W	.0000406	.0000723	-.0000317	.0000127

b = consistent under Ho and Ha; obtained from xtreg

B = inconsistent under Ha, efficient under Ho; obtained from xtreg

Test: Ho: difference in coefficients not systematic

$$\begin{aligned}\chi^2(3) &= (b-B)'[(V_b-V_B)^{-1}](b-B) \\ &= 23.93\end{aligned}$$

$$\text{Prob} > \chi^2 = 0.0000$$

(V_b-V_B is not positive definite)

<표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Hausman 검정의 귀무가설은 $\text{cov}(x_{it}, v_i)=0$ 이다. 검정통계량은 23.93이고, P값이 0.01보다 작기 때문에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된다. 따라서 확률효과 모형과 고정효과모형 중에서 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²⁶⁾ 따라서 패널자료의 특성과 Hausman 검정 결과를 고려해 보았을 때 고정효과모형이 좀 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26) 정성호(2013), STATA를 활용한 사회과학 통계, 박영사, p. 168, 민인식, 최필선(2010),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한국STATA학회, pp. 193-194

3. 자기상관검정 : Wooldridge 검정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고정효과모형은 기본 모형인 패널 선형회귀모형이다. 따라서 패널 선형회귀모형 추정량이 바람직한 추정량이 되기 위해서는 오차항에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이나 동시적 상관(contemporaneous correlation)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text{cov}(\varepsilon_{it}, \varepsilon_{jt}) \neq 0, \text{ 모든 } i \neq j \text{ 에 대해}$$

하지만 패널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패널 그룹 내에서 자기상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자기상관이 있다면 고정효과모형의 추정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를 검정하기 위해서 Wooldridge 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패널데이터의 자기상관을 검정하는 Wooldridge 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11> Wooldridge 검정결과

Wooldridge test for autocorrelation in panel data

H0: no first order autocorrelation

$$F(1, 15) = 0.007$$

$$\text{Prob} > F = 0.9363$$

자기 상관성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Wooldridge 검정을 시도해 보았다. 이 검정에서 귀무가설은 “1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p값이 0.93으로 나왔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즉, 1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있다.²⁷⁾

따라서 고정효과모델의 분석 결과를 가지고 그 의미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27) 정성호(2013), STATA를 활용한 사회과학 통계, 박영사, p. 144

제3절 결과 분석 및 평가

1. 고정효과모형의 결과 분석

<표 12>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

Fixed-effects (within) regression	Number of obs = 144
Group variable: ID	Number of groups = 16
R-sq: within = 0.6961	Obs per group: min = 9
between = 0.7447	avg = 9.0
overall = 0.7394	max = 9
	F(7,121) = 39.60
corr(u_i, Xb) = -0.0618	Prob > F = 0.0000

L_suit	Coef.	Std. Err.	t	P>t	[95% Conf. Interval]	
Union_emp	-.0014836	.0003446	-4.31	0.000	-.00216	-.00080
Ser_ratio	1001.271	483.5812	2.07	0.041	43.894	1958.648
Lawyer	.1790529	.0312835	5.72	0.000	.117119	.24098
U	50.65575	19.51899	2.60	0.011	12.01276	89.298
Temp_ratio	-605.5657	218.651	-2.77	0.006	-1038.44	-172.68
T_suit	.0123795	.0022748	5.44	0.000	.007876	.016883
Aver_W	.0000406	.0000245	1.66	0.100	-7.83e-06	.000089
_cons	-687.3173	300.5418	-2.29	0.024	-1282.31	-92.315
sigma_u	166.20167					
sigma_e	66.293507					
rho	.86273805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F test that all u_i=0: F(15, 121) = 5.26 Prob > F = 0.0000

위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모형의 설명력인 R-sq값이 0.7에 가까워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독립변수인 노동조합원수, 3차 산업종사자 비율, 변호사수, 실업률, 비정규직 비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3차 산업종사자 비율이나 실업률은 5%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text{corr}(u_i, Xb)$ 는 패널의 개체특성을 나타내는 오차항 u_i 와 설명변수 x 간 상관관계의 추정치이며, 추정된 상관계수가 -0.0618이라는 것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오차항 u_i 가 없는 모형이기 때문에 설명 오차항과 설명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추정계수의 일치성을 담보할 수 있다. 패널개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오차항 u_i 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rho = .86273805$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임을 알 수 있다. 이 값은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 값이 1에 가깝다는 것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패널 개체의 특성을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²⁸⁾ 따라서 본 모형의 ρ 값이 0.86이기 때문에 1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고,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패널 개체, 즉 각 광역시·도별 특성을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패널 개체의 특성을 감안해서 회귀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이 바로 고정효과모형이다.

분석결과 마지막 줄에 있는 F-test는 귀무가설이 $\text{all } u_i = 0$ 이다. 이 귀무가설을 받아들인다면, 상수항이 모든 패널 개체에 대해 α 로 같아지게 된다. 이 경우 패널 개체의 이질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고 합동(Pool) OLS 추정이 더 적절한 분석모형이 된다. 하지만, 위 분석결과는 $F(15, 121) = 5.26$ 이고, $\text{Prob} > F =$

28) 민인식, 최필선(2010),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pp. 130-131

0.0000 이기 때문에 위의 귀무가설이 1% 유의수준에서 기각되므로 고정효과모형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²⁹⁾

2. 가설의 검증 및 분석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했던 가설은 다음과 같이 총 5가지이다.

<표 13> 연구 가설의 검증 결과

	연구 가설	채택 여부
가설1	노동조합 가입자의 숫자가 감소할수록 노동관련 소송은 증가할 것이다.	채택
가설2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증가할수록 노동관련 소송은 증가할 것이다.	채택
가설3	변호사 수가 증가할수록 노동관련 소송은 증가할 것이다.	채택
가설4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노동관련 소송은 증가할 것이다.	채택
가설5	비정규직 종사자 비율이 증가할수록 노동관련 소송은 증가할 것이다.	기각

최초 연구가설과 위 고정효과모형의 분석결과를 간단하게

29) 민인식, 최필선(2010), 패널데이터 분석, 한국STATA학회, pp. 130-131, 정성호(2013), STATA를 활용한 사회과학 통계, 박영사, p. 150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1과 가설3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다고 보여주고 있다. 즉 ‘노동조합가입자의 숫자’는 노동관련 소송수에 음(-)의 영향을 주며, ‘변호사 수’는 노동관련 소송수에 정(+)의 영향을 준다. 가설2와 가설4도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3차 산업 종사자 비율’과 ‘실업률’이 노동 관련 소송에 정(+)의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종사자 비율’은 5%의 유의수준에서 연구 가설과는 반대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연구 결과는 아니지만 김소영(2005), 양동훈(2009) 등은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노동분쟁을 증가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노동분쟁이 증가하면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노동관련 소송이 증가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이와 반대로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측이 가능하다.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소송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이 부족하여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서 소송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서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소송을 진행할 재정적 여력도 부족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기피할 수도 있다. 즉 갈란터(Galanter)의 분류에 따를 때 가지지 못한 자(have not)일수록 분쟁해결에서 소송수단 사용이 더 기피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법률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소송에 투입할 자원을 확보하게 된다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분쟁에 있어서도 분쟁 해결을 위하여 소송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3. 종합

본 모형은 모형의 설명력도 매우 높은 편이고, 패널 그룹 내에서 자기상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분석 자료의 특성, rho 값이나 F-test의 결과, Hausman 검정 값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합동(Pooled) OLS나 확률효과모형이 아닌 고정효과모형이 더욱 더 적절하다. 그리고 독립변수들도 매우 높은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최초 가설과는 다르게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제5장 사법정책에 대한 합의

제1절 추세분석

1. 의의

본 연구에서는 노동관련 소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법연감 및 각종 사회·경제적 자료들을 통해서 패널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분석결과 각 독립변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노동분쟁에서 소송수단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독립변수들에 대해서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그 추세를 예측해 본다면 앞으로의 노동관련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사법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시계열자료(time-series)를 분석한다는 것은 어떤 자료가 과거 시점에서 얻어진 관찰값들의 변화패턴에 따라 앞으로도 변화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향후 시점의 값을 예측하는 기법이다. 즉, 현재까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변화해 온 자료는 앞으로도 그 패턴으로 나갈 것이라는 전제하에 향후 시점의 값들을 예측한다는 것이다(이원우, 2011: p 4). 시계열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변동 가운데 추세는 다음과 같다. 추세란 자료가 장기적으로 변화해 가는 큰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료가 장기적으로 커지

는지, 작아지는지, 변화가 없는지를 나타내 주는 요소를 추세라고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일 때 그것이 선형(linear)인지, 지수적(exponentially) 증가하는지 등의 함수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이원우, 2011: pp. 73-74)

따라서 노동조합 가입자 수와 3차 산업 종사자 비율, 비정규직 비율 등에 대해서 시계열 자료를 통한 추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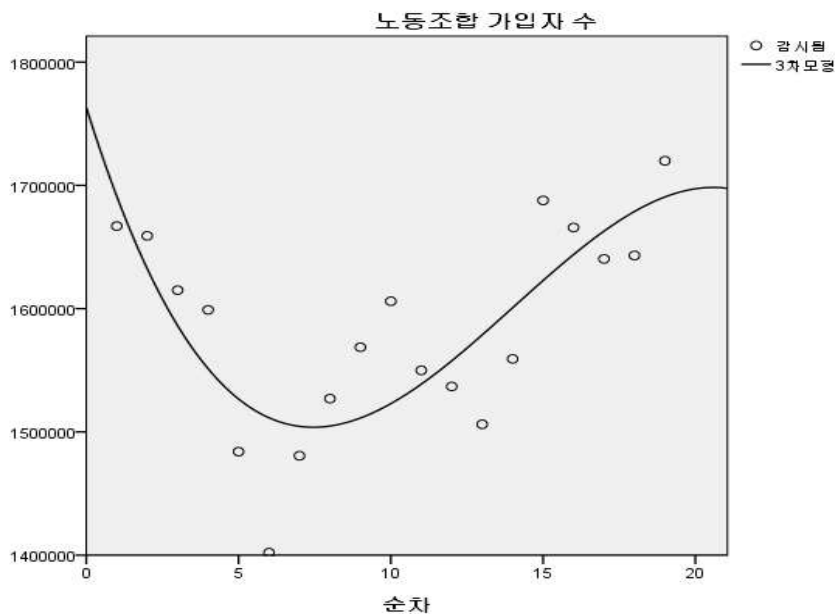
30) 변호사 숫자는 추세 분석이 아니라 현재까지 공개되어 있는 사법시험 합격 인원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의거하여 계산하였다.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로클릭과 검찰임용의 숫자가 불확실하고 향후 두 시험의 존치 여부, 변호사 시험 합격률 재조정 등의 논의가 있지만, 현재의 정책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예상 변호사 숫자를 산출하였다.

2. 각 변수들에 대한 추세분석 결과

(1) 노동조합 가입자 수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가입자 수에 대하여 1993년부터 2011년까지의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향후 그 추세를 예측하였다. 다음 그래프는 추세분석 결과이다.

<그림 9> 노동조합 가입자 추세분석 결과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일반적인 선형모형으로는 추세분석의 설명력이 매우 낮았다.³¹⁾ 여러 모형으로 추세분석을 한 결과 3차

31) 노동조합 가입자 수 추세분석에 대한 각 모형의 R-Square 값은 다음과 같다. 선형모형(-0.023), 2차모형(0.426), S모형(0.022), 성장모형(-0.022)

모형의 수정된 R-Square값이 0.571로 가장 높게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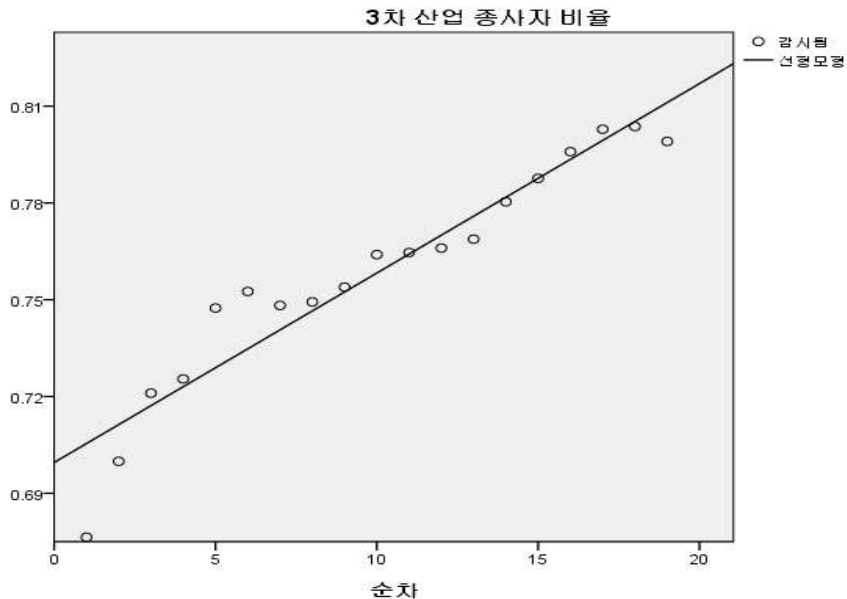
<표 14> 노동조합 가입자 추세분석 결과

연도	노동조합 가입자(명)
2012	1,697,244
2013	1,697,709
2014	1,690,956
2015	1,675,954
2016	1,651,668
2017	1,617,066
2018	1,571,115
2019	1,512,781
2020	1,441,033
2021	1,354,836

(2) 3차 산업 종사자 비율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에 대한 1993년부터 2011년까지의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향후 그 추세를 예측하였다. 다음 그래프는 추세분석 결과이다.

<그림 10> 3차 산업 종사자 비율 추세분석 결과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에 대한 추세 분석은 선형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수정된 R-Square 값이 0.903으로 나타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에 대한 추세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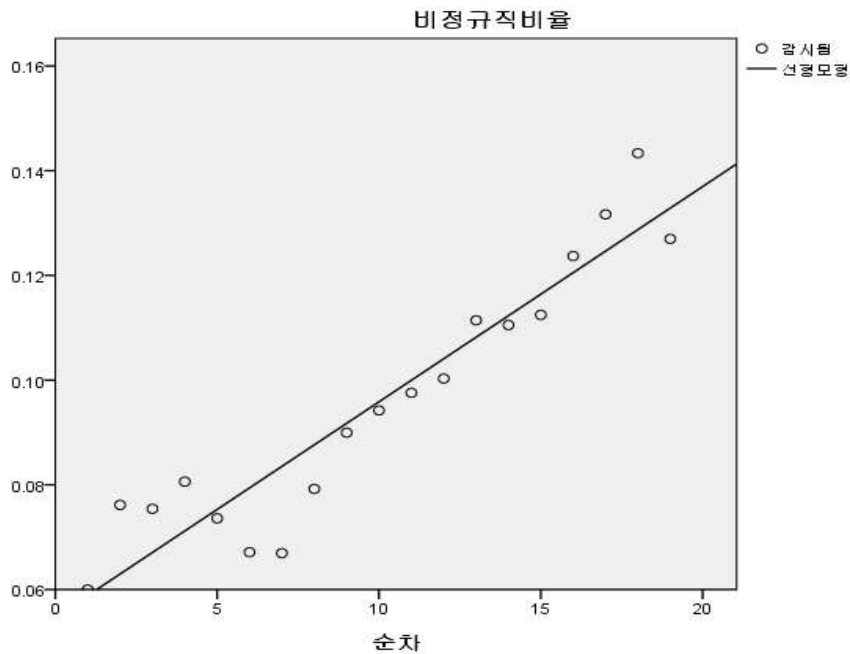
<표 15> 3차 산업 종사자 비율 추세분석 결과

연도	3차 산업 종사자 비율(%)
2012	0.82
2013	0.82
2014	0.83
2015	0.83
2016	0.84
2017	0.85
2018	0.85
2019	0.86
2020	0.86
2021	0.87

(3) 비정규직 비율

다음은 비정규직 비율에 대하여 1993년부터 2011년까지의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향후 그 추세를 예측하였다. 다음 그래프는 추세분석 결과이다.

<그림 11> 비정규직 비율 추세분석 결과



비정규직 비율에 대한 추세 분석은 선형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수정된 R-Square 값이 0.883으로 나타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비정규직 비율에 대한 추세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6> 비정규직 비율 추세분석 결과

연도	비정규직 비율(%)
2012	0.14
2013	0.14
2014	0.15
2015	0.15
2016	0.15
2017	0.16
2018	0.16
2019	0.17
2020	0.17
2021	0.17

제2절 노동관련 소송의 전망

앞에 제4장에서 노동관련 소송 증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고, 고정효과모형을 통하여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노동관련 소송 증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추세를 분석하고 그 수치를 알 수 있다면, 향후 노동관련 소송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해 볼 수 있다.

고정효과모형에서 각 요인들과 노동관련 소송에서 얻은 회귀계수와 추세분석을 통하여 2021년 각 요인들의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표 17> 2021년 노동관련 소송수 전망

L_suit	회귀 계수	2011년 수치	2021년 예상치	증감	노동관련 소송증감
노동조합 가입자 수	-0.00148	1,719,922	1,354,836	-365,08	+541
3차산업 종사자 비율	1001.27	81%	87%	+6%	+6,008
변호사 수	0.17905	10,289	27,050 ³²⁾	+16,761	+3,001
비정규직 비율	-605.565	13%	17%	+4%	-2,422
계					+6,045

32) 2011년 등록 변호사 10,289명, 2012-2021년 변호사 시험 합격자 15,000명, 2012-2018년 사법시험 합격예상인원 3,861명을 더하였다. 이 값에서 변호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고정효과모델의 회귀계수와 각 요인에 대한 추세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2021년 노동관련 소송 수를 예측해보면 6,045건 정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나타난다.

사 시험에서 매년 로클릭 100명, 검사 40명이 임용된다고 가정하였고, 사법 시험에서도 매년 100명이 검사로 임용된다고 가정한 수치이다. 구체적인 수치는 변화할 수 있다.

제3절 합의

추세분석 결과를 통하여 분석대상 기간의 10년 후인 2021년 노동관련 소송수에 대한 예측을 해본 결과 2011년보다 노동관련 소송이 6,045건이 증가한다고 나타났다. 이는 2011년 노동관련 소송이 5,827건임에 비추어 104%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노동관련 소송건수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민사 1심 임금관련 소송과 산업재해 소송에 국한한 수치이며, 민사의 소액사건과 2심, 행정소송의 근로관계에 대한 소송, 관련 형사 소송까지 고려하면 노동관련 소송이 앞으로 급증할 것임을 예상하게 해준다. 기존의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이 집단적 노동분쟁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개별적 노동분쟁의 증가는 기존의 노동분쟁해결 시스템의 변경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 1991년 노동분쟁 관련 민사소송의 건수가 1,054건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3,16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동일 기간 동안 집단분쟁의 수는 1/3로 감소³³⁾하고 있는 추세와 비교하면 개별적 분쟁과 집단적 분쟁의 변화추이가 분명하게 대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별적 노동분쟁의 증가는 노동분쟁처리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소영(2005)은 세계 각 국에서 기업들이 고용 유연성 확대를 위하여 고용시스템 유연화를 확대시켰고, 이는 근로자들의 권리분쟁(dispute of rights)을 증가시켰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자의 권리분쟁은 주로 개별분쟁(individual disputes) 형태를 띄고 있으

33) 류이치 야마카와(2005), 일본의 노동분쟁해결체계 : 최근의 동향, 배경 및 미래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분쟁해결기법에 관한 국제세미나

며, 과거의 집단적 분쟁과는 다른 개별적 분쟁의 형태를 취하는 권리분쟁에 적합한 권리분쟁 처리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노동법 및 노사관계의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³⁴⁾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많은 이들이 노동법원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노동법은 양 당사자가 대등한 시민법 원리를 상당 부분 수정하면서 등장한 것이지만, 노동사건이 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되면 노동소송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는 한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고 일반 민사소송절차는 형식적으로 평등한 당사자 대등주의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 측면에서 노사의 실질적 대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없으면 실체법상 보장된 권리가 소송절차에 의하여 무시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법원의 구조 및 운영 실태를 보면 노동전문법관이 부족하고 소송절차상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여 많은 시일과 비용이 소요되고 노동가처분에서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김선수, 2004).

더욱이 전통적인 해고와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관련된 노사 분쟁이 매년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서 최근에는 비정규 고용에 대한 차별과 관련된 분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복수노조시행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분쟁,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교원 및 공무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등 새로운 분쟁유형에 적합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³⁵⁾이 제시되고 있다. 무엇보다 부당해고와 같이 근

34) 김소영(2005), 개별적 근로관계 분쟁의 증가에 대응하는 분쟁처리시스템의 필요성, 한국노동연구원, p. 1

35) 이희성(2005),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동법원의 도입정책의 필요성과 방안, pp. 931-932, 법과 정책연구 5권 2호

로자에게 가장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안에서 노동위원회의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를 취하고 있지만, 노동위원회는 법원을 전혀 구속하지 못하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질적으로 5심제와 같은 운영이 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의 노동위원회가 실질적으로 5심제와 같은 운영이 된다는 문제점은 중앙노동위원회 이후의 절차에서 노동사건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고, 노동위원회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이라는 점 때문인데, 노동위원회의 절차를 없애고 법원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서 노동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노동사건에서의 권리구제방법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노동법원에 대한 도입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³⁶⁾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고려하면 향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노동분쟁과 노동관련 소송을 해결하는 분쟁해결제도의 재정비의 측면으로써 노동법원의 도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노동 분쟁이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과 현행의 민사법원에서의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노동분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유형의 권리 분쟁이 증가할 것임을 고려해 보았을 때 노동법원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2011년 기준으로 민사소송 1심의 임금소송과 산업재해 소송이

36) 이철수, 박은정(2005),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pp. 101-102, 노동법연구 제 18호

5,827건 이었으며,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10년 후인 2021년에는 노동관련 소송이 104% 증가한다고 예상 된다. 그리고 분야별 전문 법원의 2011년 소송건수를 살펴보면, 특허법원이 1,257건, 서울 행정법원이 7,669건이며 이중 근로관계 소송이 1,604건으로 이 사건이 노동관련 소송으로 분류된다면 오히려 2011년에도 노동관련 소송이 더 많게 된다. 따라서 노동분쟁의 양적 팽창과 다양한 분쟁 유형의 증가, 노동분쟁의 특수성, 현행 노동위원회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분쟁해결제도의 재정비 차원에서 하나의 건설적 대안으로써 노동법원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야 보아야 한다.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노동분쟁에서 소송수단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노동관련 소송이 어떻게 변화할지 전망하여 그 사법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의 문헌들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요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사법연감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다양한 가설을 가지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선정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가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노동조합 가입자 수나 실업률, 변호사의 숫자와 같은 사회 거시적인 변수들이 법원의 소송제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적으로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두 번째로는 노동분쟁에서 어떤 요인들이 소송수단 사용에 영향을 주는지 그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 연구가설을 세워서 그 타당성을 검증해 보았다. 비록 비정규직 비율이 연구가설과는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주어서 가설이 기각되었지만,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했던 다섯 가지 독립변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독립변수로 사용한 ‘노동조합 가입자 수’, ‘3차 산업 중

사자 비율’, ‘변호사수’, ‘비정규직 비율’의 변수에 대한 시계열 추세 분석을 통하여 향후 노동관련 소송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인지 예측하고 그 사법정책적 시사점으로 노동법원 도입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그 동안 노동법원 설립에 대하여 규범적인 차원에서 그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가령 노동법은 일반법과 다른 특수한 법 영역이고, 이러한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행정법원이나 특허법원과 같이 전문법원이 따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근거 자료는 제시되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사법연감의 통계자료와 각종 경제지표를 통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노동관련 소송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그러한 요인들의 추세 분석을 통하여 향후 노동관련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증가하게 될 노동관련 소송을 보다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의 대안으로써 노동법원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노동법원의 도입뿐만 아니라 적절한 사법행정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 사법부의 조직과 인력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노동분쟁

에서 여러 이유와 조건들 때문에 민사 1심의 제한된 소송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민사소송에서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액사건에 대한 분석이 제외되었다. 이는 법원이 소액사건은 분야별 분류 집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당해고 등과 같이 노동법령에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를 취하고 있는 행정소송들은 행정소송법 관할법원의 규정에 따라 모두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에 접수해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근로관계에 대한 행정소송의 1심 접수는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각 지역별로 유의미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분쟁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제외되었다. 물론 이러한 측정되지 않은 각 패널 개체에 대한 오차는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함으로써 상당부분 완화가 되었지만, 분석하고자 했던 대상들 중 일부가 제외되었다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두 번째로는 일부 법원의 관할이 행정구역과 불일치하였다. 이는 사법부의 관할과 행정부의 관할이 동일하지 않다는 한계에서 기인한다. 비록 관할이 중첩되는 지역이 많지 않고, 중첩되는 지역에서 노동관련 소송이 적게 제기되었을 것이라고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사회·경제적인 변수들과 소송과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행정구역과 사법부의 관할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는 추세분석이 가지는 한계가 존재한다. 추세분석은 과거로부터 축적된 데이터가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노동관련 소송 증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향후 그러한 추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정 하에 미래의 노동관련 소송수를 예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설정

한 변수들이 불규칙하게 변화한다면 노동관련 소송수의 예측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관련 소송수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2013년 12월 18일에 선고된 두 통상임금과 관련된 판결³⁷⁾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신의칙에 반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정기상여금에 기한 추가임금 청구는 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만약 신의칙에 의한 추가임금 청구를 제한하지 않았더라면 2014년에는 임금 관련 민사소송이 일시적으로 급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당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임금 관련 소송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지는 살펴볼 일이지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등으로 인하여 노동관련 소송이 사회·경제적 변수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37)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판결

참고문헌

1. 국내문헌

단행본

- 김형배(2010), 「노동법」, 박영사
- 민인식, 최필선(2010),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한국
STATA학회 출판부
- 정성호(2013), 「STATA를 활용한 사회과학 통계」, 박영사
- 이원우(2011), 「시계열 자료 분석 : 예측을 위한 통계적 기법」,
자유아카데미
- 임종률(2013), 「노동법」, 박영사

연구논문

- 김두얼(2012), 사법정책과 경제성장, 『한국경제포럼』 5권 1호
- 김영범, 박준식(2011),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 분석-고용 양극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2011년
통권 83호
- 김소영(2005), 개별적 근로관계 분쟁의 증가에 대응하는 분쟁처리
시스템의 필요성, 『한국노동연구원』
- 김진, 이상희(2002), 공익소송의 이론적·역사적 배경,
『공익소송위원회 활동보고서 1999.8-2002.1.』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소송위원회.

-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편(2004), 노동법원론, 『노동과법』, 제4호,
금속법률원
- 나인강(2008), 여성 근로자의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5권 2호
- 류주한(2008), 공공분쟁으로서의 노동분쟁, 추이와 성격: 1990-2006
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학
47권 0호
- 류이치 야마카와(2005), 일본의 노동분쟁해결체계 : 최근의 동향,
배경 및 미래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분쟁해결기법에 관한 국제세미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1994). 한국 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김영삼 정
부에 대한 규범적 평가. 관악사.
- 배종석(1997), 노동조합 조직률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OECD 9
개국(1950-1985)을 중심으로, 『산업관계연구』, 제8권
- 신광영(1995), 산업사회에서의 노조조직률 결정요인 연구, 『한국사
회학』, 제29집 가을호
- 이철수, 박은정(2005),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노동법
연구』, 제 18호
- 양동훈(2009), 개별 노동분쟁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경영논총』, 제20집 2호
- 이시균, 김정우(2005),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 결정요인 분석,
『노동리뷰』, 2005년 10월호(통권 제10호)
- 이희성(2005),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동법원의 도입정
책의 필요성과 방안, 『법과 정책연구』, 5권 2호
- 임정현(1992), “반민주악법과 법률관계투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편. 『민주법학』, 4. 1992년 하반기. 관악사.
- 조국(1993). “변화하는 한반도와 ‘법률투쟁’의 고리.” 민주주의법학
연구회 편. 『민주법학』, 5. 1993년 상반기. 관악사.
- 송송준(2008), 증권집단소송의 발생요인분석과 법적 대응과제, 경영
법률학회, 『경영법률』, 제18집 제2호
- 신광영(1995), 산업사회에서의 노조조직률 결정요인 연구, 『한국사
회학』, 제29집 가을호
- 정인섭(2005), 노동분쟁의 특수성과 노동법원의 전문성, 『노동법연
구』, 제19호
- 정홍준(2012),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노동자의 노조가입에 관한
탐색적 실증연구, 『노동연구』, 제23집
- 최원익(2006).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내 FDI입지 결정요인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무역학회지』, 제31권
제1호 통권 제65호
- 황승흠(1996), 분쟁에서 법의 동원 : '87년 이후의 노동분쟁을 중심
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홍일표(2008), 시민사회와 법 ;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운동과 법의
동원: 운동 레퍼토리로서 “소송”의 가능성과 한계,
『시민사회와 NGO』, 6권 2호

2. 외국문헌

Amanda Carmignani and Silvia Giacomelli, (2010). “*Litigation in Italian civil courts*” EUROSISTEMA Working papers. Number 745 – February 2010

Alan Marcoa & Ted Sichelmanb, (2010). “*Do Economic Downturns Dampen Patent Litigation?*”, 5th Annual Conference on Empirical Legal Studies Paper, July 16, 2010

Bachmeier, lance j.; Gaughman, Pratricks; Swanson, Norman R.(2003) “*The Volume of Federal Litigation and the Macroeconomy*”, Rutgers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y, No. 2003, 18

Bain, G.S and Elsheikh, f. (1976), “*Union Growth and the Bussiness Cycle: An Econometric Analysis*”, London, Basil Blackwell.

GERHARD CLEMENZ AND KLAUS GUGLER. (2000), “*Macroeconomic Development and Civil Litigation.*” Europea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9:3; 215-230, 2000

Kennedy, P. (2003). “*A Guide to Economics*” (Fifth edition). Messachusette: Cambridge The MIT Press

Visser, J. (1988), “*Trade Unionism in Western Europe: Present Situation And Prospects*”, Labour and Society

13, pp. 125-182

Western, B.(1993), *“Postwar Unionization in Eighteen Advanced Capitalist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 pp. 266-282

3. 정부 간행물 및 기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 각 년도.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 년도.

법무부, 법무연감, 각 년도.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통계자료, 각 년도

4. 웹사이트

국가통계포털 - www.kosis.kr

국가기록원 - www.contents.archives.go.kr

국회전자도서관 - www.dl.nanet.go.kr

고용노동부 - www.moel.go.kr

법원행정처 - www.scourt.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법무부 - www.moj.go.kr

통계청 - www.kostat.go.kr

부록. 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

Fixed-effects (within) regression

Number of obs = 144

Group variable: ID

Number of groups = 16

R-sq: within = 0.6961
 between = 0.7447
 overall = 0.7394

Obs per group: min = 9
 avg = 9.0
 max = 9

F(7,121) = 39.60

corr(u_i, Xb) = -0.0618

Prob > F = 0.0000

L_suit	Coef.	Std. Err.	t	P>t	[95% Conf. Interval]	
Union_emp	-.0014836	.0003446	-4.31	0.000	-.0021657	-.0008014
Ser_ratio	1001.271	483.5812	2.07	0.041	43.89485	1958.648
Lawyer	.1790529	.0312835	5.72	0.000	.117119	.2409869
U	50.65575	19.51899	2.60	0.011	12.01276	89.29874
Temp_ratio	-605.5657	218.651	-2.77	0.006	-1038.443	-172.6883
T_suit	.0123795	.0022748	5.44	0.000	.007876	.016883
Aver_W	.0000406	.0000245	1.66	0.100	-7.83e-06	.000089
_cons	-687.3173	300.5418	-2.29	0.024	-1282.319	-92.31554
sigma_u	166.20167					
sigma_e	66.293507					
rho	.86273805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F test that all u_i=0:

F(15, 121) = 5.26

Prob > F = 0.0000

확률효과모형 추정결과

Random-effects GLS regression
Group variable: ID

Number of obs = 144
Number of groups = 16

R-sq: within = 0.6107
between = 0.9864
overall = 0.9461

Obs per group: min = 9
avg = 9.0
max = 9

corr(u_i, X) = 0 (assumed)

Wald chi2(7) = 2386.20
Prob > chi2 = 0.0000

L_suit	Coef.	Std. Err.	z	P > z	[95% Conf. Interval]	
Union_emp	-.0012287	.0002007	-6.12	0.000	-.0016221	-.000835
Ser_ratio	-100.2798	76.34128	-1.31	0.189	-249.9059	49.34637
Lawyer	.0981987	.0260696	3.77	0.000	.0471032	.1492942
U	.6747774	8.80757	0.08	0.939	-16.58774	17.9373
Temp_ratio	-547.4688	194.965	-2.81	0.005	-929.5931	-165.344
T_suit	.0191277	.0009573	19.98	0.000	.0172514	.0210039
Aver_W	.0000723	.0000209	3.46	0.001	.0000313	.0001133
_cons	48.80103	100.7842	0.48	0.628	-148.7323	246.3344
sigma_u	0					
sigma_e	66.293507					
rho	0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Abstract

Factors that affect the usage of legal means in labor dispute cases and its implication on legal policy

Lee Byung Hyu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usage of legal means in labor dispute cases and to infer its implication on legal policy by analyzing the trend of them. Hardly did researchers conduct on what type of social and economic factors lead to lawsuits, while dispute resolution based on a

court system has been important in South Korea. Thus,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do a research on what type of social and economic factors influenced the rise and fall of the number of labor-related lawsuits both positively and specifically. Provided that there continues such a change, it is likely to clarify how government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judicial system should make a response.

This study confines the act of filing lawsuits of court according to its goal as mentioned above, even though labor disputes appear in a variety of ways with its myriad forms of solutions as well. Based on data from a judicial yearbook and government organization from 2003 to 2011, the study used 144 penal data set combined with cross-sectional data from 16 provinces and states in South Korea. Both lawsuits over wage as a civil lawsuit and the first trial of an industrial accident cases as a compensation for damage are dependent variables. In a similar vein, the number of members of labor union, the ratio of tertiary industry, the number of lawyers, the ratio of the jobless, and the ratio of irregular workers are set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is study puts both the total number of first trials in civil lawsuits and the average wage of wage workers as a control variable. Concerning the analytical framework, this study adopted a fixed model in analyzing, which is much suitable to use compared with a random model.

The study is designed to clarify five research hypothese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the fixed mode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number of members in labor union negatively influenced the number of lawsuits while the number of lawyers positively did with a significance level of one percent. Secondly, both the ratio of the workers of the tertiary industry and the ratio of the jobless positively affected the labor lawsuits with a significance level of five percent, respectively. Lastly, the ratio of irregular workers negatively influenced the number of lawsuits, contrary to research hypotheses. Concerning the ratio of irregular workers, the result is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qualitative studies. Therefore, this study surmised that irregular workers are likely not to use legal means compared with regular workers due to the lack of appropriate legal sources.

Furthermore, this study conducted a trend analysis on major independent variables. It calculates the number of labor-related lawsuits in the future by using anticipated figures resulted from the trend analysis based on a fix model. In consequence, the study anticipated a surge in the number of labor-related lawsuits in the future. It also suggested that South Korea should seriously consider establishing labor court as a measure to solve labor-related lawsuits which will increase onwards. Last but not least, the study concludes by suggesting that both scientific and positive analysis would lead

to deduce rational decision-making in judging how both organization and manpower should be structured in order to provide appropriate legal administrative services.

keywords : Labor Dispute, the Usage of Legal Means, Labor Court

Student Number : 2011-22205